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言論弘報學科

元 成 心

2017年 2月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高榮哲

元成心

이 論文을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6年 12月

元成心の 言論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6年 12月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투표결정요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유권자 600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해 연구문제의 내용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선거 1주일 전(31.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선거일 보름 전후(22.7%)와 선거일 한 달 전후(22.4%), 선거일 두 달 전후(15.2%) 순이었다. 선거기간 중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는 30.3%로 나타났다. 투표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한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능력·경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정당’과 ‘공약사항’, ‘주위의 평판/이웃의 조언’ 순이었다.

둘째, 투표후보 선택이나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변인은 투표후보 선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는 40대와 30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과 관련해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새누리당 후보를, 자신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지지후보 변경은 ‘중도’와 ‘보수’ 성향 유권자에서 많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디어 이용시간 및 선거관련 뉴스나 정보를 입수한 채널 유형에 따른 투표행태 검증에서는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소셜미디어 등을 아우르는 ‘인터넷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넷째, 투표후보 선택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 비해 영향의 정도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선거기간 중 돌출되었던 중앙이슈와 지역이슈의 영향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공천 갈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국민의당의 거대 양당 심판론’ 순으로 영향의 정도가 컸다.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등에서 영향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슈의 경우, 새누리당 후보투표자에서는 ‘현역의원 교체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논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과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투표결정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대 총선에서는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정당 요인에서는 유권자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소속, 정당 간 대립·공방을 포함한 정치적 상황 순으로, △후보자 요인에서는 후보자의 자질,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주위의 평판 순으로, △이슈 요인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 순으로, △미디어 요인에서는 TV토론 내용,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 내용 순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 등도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제20대 총선, 투표결정요인, 투표행태, 미디어 요인,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유권자 요인.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5
제3절 연구문제	13
제2장 이론적 논의	15
제1절 투표행태 연구의 이론적 배경	15
제2절 투표행태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20
1. 정당 요인	21
2. 후보자 요인	24
3. 이슈 요인	27
4. 미디어 요인	30
5. 유권자 요인	36
제3절 제주지역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39
1. 역대선거의 흐름과 특징	39
2. 제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45
제3장 연구방법	50
제1절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측정 항목	50
제2절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54
1. 연구 대상	54
2. 연구방법 및 조사 대상	54
3. 설문지의 구성	56
4. 분석방법	57
5.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57
제4장 연구결과	61

제1절 투표행태 및 투표결정 요인에 관한 일반적 조사	61
1. 표본의 특성과 투표행태 및 미디어 이용	61
1) 표본의 선거구 및 투표 유무	61
2) 후보자 투표 및 정당 투표	62
3) 투표결정 시기, 후보 변경, 정치성향	63
4) 유권자의 후보 결정시 고려사항	64
5) 매체별 뉴스 이용시간 및 선거정보 입수채널	64
2. 투표결정 요인 및 이슈 영향 인식	66
1) 투표결정 요인 평균분석	66
2) 중앙이슈와 지역이슈 영향 인식 정도	67
제2절 연구문제 검증 결과	69
1. <연구문제 1>의 검증 : 투표행태와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	69
2. <연구문제 2>의 검증 : 투표행태와 미디어 이용량	71
3. <연구문제 3>의 검증 : 투표행태와 선거정보 입수채널	74
4. <연구문제 4>의 검증 : 투표행태와 투표결정 요인	77
5. <연구문제 5>의 검증 : 중앙/지역 이슈 영향인식과 투표행태	80
1) 투표후보와 중앙이슈 영향인식	81
2) 투표후보와 지역이슈 영향인식	82
3) 지지후보 변경과 중앙/지역 이슈	84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87
제1절 요약 및 결론	87
1. 연구결과의 요약	87
2. 결론 및 함의	9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3
참고 문헌	105
부록: 설문지	113
Abstract	120

표 목차

표 1. 투표결정요인 관련한 연구	5
표 2. 제주도 선거구별 제20대 총선 후보자 선택기준	23
표 3.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태 관련 연구	31
표 4. TV토론, 선거보도, 여론조사, 정치광고 요인 투표영향 연구	32
표 5.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	40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정당별 의석배분 현황	41
표 7. 역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득표 현황	42
표 8. 역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후보자 득표 현황	43
표 9. 중앙언론의 제20대 총선 결과 분석기사 주요 내용	46
표 10. 제주도 언론의 제20대 총선 결과 분석기사 주요 내용	47
표 11. 제20대 총선기간 KBS제주의 선거보도 주요 내용	48
표 12. 투표결정 요인 측정항목	51
표 13. 사회·정치적 쟁점이슈 측정항목	53
표 14. 표본의 구성	55
표 15. 선거정보 입수채널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58
표 16. 투표행태 주요변인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59
표 17. 표본의 선거구, 투표 유무, 투표 불참 이유	61
표 18. 후보자 투표 및 정당 투표	62
표 19. 투표후보 결정시기, 투표후보 변경, 정치적 성향	63
표 20. 후보 결정시 고려사항	64
표 21. 매체별 평균 뉴스 이용시간	65
표 22. 유권자의 선거 정보 입수채널	65
표 23.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 평균분석	67
표 24. 사회적·정치적 주요이슈 영향 인식정도	68
표 25. 인구통계적 변인과 유권자 투표행태 교차분석	69

표 26. 유권자의 정치성향과 투표행태 교차분석	70
표 27. 투표후보 선택과 미디어 이용시간 분산분석	72
표 28.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미디어 이용시간 분산분석	72
표 29. 투표후보 선택과 선거정보 입수채널 분산분석	75
표 30.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선거정보 입수채널 분산분석	77
표 31. 투표후보 선택과 투표결정 요인 분산분석	78
표 32.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투표결정 요인 분산분석	79
표 33. 투표후보 선택과 중앙이슈 분산분석	80
표 34. 투표후보 선택과 지역이슈 분산분석	83
표 35.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중앙이슈 분산분석	85
표 36.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지역이슈 분산분석	86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심(標心)을 정확히 읽어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시기의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의 향방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유동적이고 다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오래전부터 정치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커뮤니케이션학 분야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우리나라에서 선거와 관련한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폭넓게 진행되어 왔다. 그 중 정치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언론 수용자 태도변화에 주목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결정을 하는데 있어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기숙(1996)의 ‘합리적 선택이론’ 및 권혁남(1997)의 ‘투표결정 요인’에 관한 방법론적 고찰 이후, 후속 연구들(서영남, 2012; 송건섭·이근수, 2011; 이갑윤·이현우, 2000; 이동규, 2013; 이상목, 2011; 이재일, 2007; 전재섭, 2009; 정인태, 2013a, 조진만·최준영, 2006; 지병근, 2013; 최미경, 2011)이 이어지면서 투표결정 요인에 관한 논의는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소속정당, 후보자의 자질, 선거 이슈 및 미디어 등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투표행태 및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특정 시점의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투표결정요인의 검증결과를 각 선거에 공히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선거 유형, 시기, 연구대상 지역에 따라 연구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과정에서 이슈요인도 많은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 추상적 또는 포괄적 개념을 갖고 이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¹⁾. 이로 인해 선거캠페인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 어떤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 선거기간 중에 돌출된 각종 이슈들 가운데 중앙단위 이슈와 지역단위 이슈가 동시에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중앙이슈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지역에서 부각되는 다양한 이슈영향의 세부적 흐름을 살피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셋째, 특정한 몇몇 독립변인이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주목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뤄진 반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다.

권혁남(1997)은 20여년 전에 이미 선거연구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왔으나 아직도 어떠한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후보를 선호하게 만드는지, 투표결정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미경(2011) 역시 이러한 한계를 언급하며, 다양한 요인 중 어떤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연구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유독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최근 선거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혼전 상황의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임박해서 지지후보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행태 및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그동안 논의돼 온 투표결정요인의 속성을 좀 더 구체화시켜 연구할 필요성을 갖게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대 총선 개표 결과, 선거기간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하여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새누리당 ‘참패’, 더불어민주당 ‘압승’, 국민의당 ‘약진’이란 이변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뤄진 언론의 판세분석 보도에서는 대부분 새누리당의 우세를 전망했다²⁾. 심지어 선거당일 방송사 출구조사

1) 기존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내용 보다는 ‘공약’, ‘정책’, ‘이슈’ 등으로 명명해 이의 영향력을 측정 하였거나, 이슈의 세부내용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중앙이슈로 한정하여 분석한 경우가 많았다.

2) 서울신문 (2016, 4, 11). <300석뿐인데...최선의 성적표는>.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2005003>

에서도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접전 속에 근소한 차이로 우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선거결과는 이러한 조사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³⁾. 여당인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에 올라서는 ‘이변’이 연출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⁴⁾. 이는 여론조사의 정확성 결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 표심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즉, 사전 예측결과와 실제 투표결과 사이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역대 선거와 달리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권자에게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번이 상당히 많았던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해보는 것도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를 사례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제주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려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선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선거행태, 여론조사 결과, 또는 선거메시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제주도민의 선거행태(정대연, 1996)를 비롯하여,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공천과정(양길현, 2006), 여론조사 결과를 통한 승패요인(김진호·김성수, 2006), 선거운동 방법으로서 성명서 내용(김성호, 2007),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언론 보도문제점(고영철, 2011), 방송의 선거의제 형성과정(김광우, 2010), 전국과 지역방송간 선거캠페인 보도 비교(강병효, 2011) 등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관련해 미디어효과를 간접적으로나마 추정해보기 위해 20대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친 선거관련 이슈들 중에서

뉴스시스 (2016, 4, 7). <총선판세 종합 : 새누리 140, 더민주 110+a, 국민의당 20+a '예측'>.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6_0014005703&cID=10301&pID=10300

3) 제20대 총선 결과 전체 300석 중 새누리당 122석(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무소속 11석으로 배분되었다.

4) 선거일 6일전에 발표된 제주도 3개 선거구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3곳 중 2곳은 초박빙 접전, 1곳은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개표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모두 차지하는 것으로 귀결됐다.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는 총선과 같은 선거에서는 중앙이슈와 지역이슈가 동시에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중앙이슈를 중심으로 이슈요인을 평가하면서 논의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시도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20대 총선에서 제주도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투표결정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 규명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국내에서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논의는 1990년대 조기숙과 권혁남 등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 조기숙(1996)⁶⁾은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를 통하여 미국 선거의 이론 및 연구사례와 함께 한국에서의 선거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권혁남(1997)⁷⁾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활발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전까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및 속성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투표결정요인 논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검증으로 이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의 연구가 한층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치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투표행태 결정요인 연구는 다른 주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은 많지 않았다.

투표행태 결정요인 연구의 흐름은 크게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 그리고 특정 독립변수 요인이 유권자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로 나뉘고 있다. 그 가운데 유권자 투표행태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는 연구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투표결정요인 관련한 연구⁸⁾

연구자	연구주제
권혁남(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단행본)
김동석(2012)	“유권자 투표행태 결정 요인”(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김재전(2008)	“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제4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 유권자)
박천호(2008)	“미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분할투표 결정요인”(2000, 2004년 미국 대선, 상·하원 동시선거)

5) 국내 대통령 선거 관련 연구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 치중한 반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에는 행태주의적 방법을 응용한 선거행태 연구가 이뤄졌다. 그러다가 1987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표행태 연구가 이뤄지게 되었다(정성호, 2003). 투표행태 관련 초기 연구에서는 황근(1993)의 ‘유권자의 정치적 도식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6)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7) 권혁남(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서울: 나남.

송건섭·이근수(2011)	“유권자 투표행태와 결정요인”(2002·2006·2010년 지방선거, 대구·경북지역)
송건섭(2015)	“투표행태와 후보자 선택모델”(지방선거, 대구·경북지역)
서영남(2012)	“투표참여와 정당 선택의 예측 변인”(19대 총선, 전국)
신진(2008)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문제점”
이갑윤·이현우(2000)	“총선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14~16대 총선, 전국 권역별)
이강형(2007)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개관: 투표행태 연구 중심”
이동규(2013)	“유권자 특성에 따른 지지후보 결정시기: 인구 사회학적 속성, 정치성향, 미디어이용”(18대 대선, 전국 유권자)
이상목(2011)	“유권자 투표결정요인”(201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일(200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결정요인”(2007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수도권·충청·전라·경상도)
이준용(1998)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이지선(2007)	“부동층 유권자 투표행태”(16대 대선·17대 총선, 전국)
전재섭(2009)	“유권자의 투표행태”(18대 총선, 수도권 유권자)
정인태(2013a)	“선거캠페인 법정 홍보매체의 후보자 결정요인과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19대 총선, 부산 유권자)
정인태(2013b)	“선거매체 유형과 투표결정 요인”(2010 지방선거, 19대 총선, 2012 대선, 부산 유권자)
정진민(2012)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2010년 지방선거, 전국)
조기숙(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단행본)
조기숙(2013)	“‘정당지지’에 기초한 선거예측 종합모형”
조진만·최준영(2006)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투표 결정요인”(17대 총선, 전국)
지병근(2013)	“투표참여 결정요인의 연령별 다양성”(19대 총선, 전국)
최미경(2011)	“한국 투표행태의 결정요인 탐색”
황 근(1993)	“유권자의 정치적 도식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14대 대선, 전국)

* 괄호 안은 연구대상 분석선거 및 대상지역.

연구대상의 선거유형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간적 범위에서는 전국단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지역단위 혹은 특정 선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었다.

먼저 투표결정요인의 유형은 연구자에 따라 논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혁남(1997, 78쪽)은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① 소속 정당 등을 포함한 후보자 요인, ②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종교, 정치태도나

8) 이 표의 논문 리스트는 주요 학회에 게재된 논문 및 학위논문 검색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념 등을 포함하는 유권자 요인, ③ 후보와 유권자들을 연결해주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요인, ④ 이들 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요인 등 4가지 차원으로 제시하였다⁹⁾. 그러면서 세부 논의에서는 정당 요인, 이슈 요인, 후보자 이미지 요인, 미디어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전재섭(2009)은 투표결정요인의 주체적 변수를 유권자 요인으로, 객체적 변수를 후보자 요인, 정당요인, 경제적 요인, 회고적 요인, 후광요인, 지역주의 요인, 이념요인으로 나눠 설명했다¹⁰⁾. 이는 투표행태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의 사회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 합리적 요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¹¹⁾.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은 ① 후보자 요인, ② 정당요인, ③ 정책쟁점 요인, ④ 유권자 요인으로 압축해 제시됐다.

투표결정요인 유형과 관련한 또 다른 논의들을 보면, 이재일(2007)은 유권자의 투표결정 변수로 ① 근대화·동원투표요인¹²⁾(금품, 향응, 관권, 지연, 혈연, 학연), ② 사회·경제적 요인(성별, 연령, 소득 및 교육수준, 출신지, 직업), ③ 합리적·심리적 요인(투표효능감, 정치적 이슈, 선거관심도, 정당선호도, 투표 기회비용, 정치·정부 불신)으로 나눠 고찰했다. 송건섭·이근수(2011)는 정당요인, 공약요인, 인물요인, 후보능력, 후보평판, 외부요인 등으로 구분하였고, 이상묵(2011)은 선거공약(정책), 정당요인, 후보자의 이미지, 후보자의 평판, 후보자의 내적 요인, 후보자

9) 권혁남(1997, 78-79쪽)의 논의에 따르면 첫 번째 후보자 요인은 후보의 소속정당, 특정 이슈에 대한 입장, 후보의 개인적 속성, 선거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후보의 개인적 속성은 정치인으로서는 또는 일반인으로서 갖고 있는 자질이나 내재된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권자 요인은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 수입, 종교 등 유권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변인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유권자의 정치태도나 신념, 정당일체감, 정치나 선거에 대한 관심도, 매스미디어 이용행위 등을 포함한다. 세 번째 정치커뮤니케이션 요인은 텔레비전, 신문 등의 매스미디어, 대중연설, 옥외 광고, 유권자 접촉 등을 포함한다. 이중 매스미디어의 선거보도, 논평 및 사설, TV 토론, 여론조사결과 보도, 정치광고 등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다. 넷째, 상황요인은 앞서 설명한 3가지요인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요인들을 포함한다.

10) 전재섭(2009) 논의에 따르면, 회고적 요인은 유권자가 과거 및 현 정부, 집권당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지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결정요인을 말한다. 후광요인은 대통령 등 특정인의 후광에 의해 결정되는 투표행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의 후광효과로서 그의 소속 정당후보, 그를 지지하는 후보들에게 표심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11) 투표행태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12) 이재일(2007)의 논의를 보면, 동원투표란 유권자 스스로 뚜렷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마을, 정부관료 등의 권유나 압력에 따라 선택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연구에서는 근대화요인 변수로 근대화 정도에 따른 도시화·산업화가 유권자의 문화해독률, 언론매체 접촉도 등의 증가 등을 꼽았다.

의 외적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서영남(2012)은 미디어 변인을 추가하여 ① 사회학적 결정변인(성별, 지역, 연령, 직업, 소득 등), ② 심리학적 결정변인(정치이데올로기, 정치관심, 정치냉소, 주요정당에 대한 감정온도), ③ 경제적 변인(의제 중요도 인식, 쟁점소유권 인식), ④ 매체이용 변인(미디어 이용 정도)을 투표결정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김동석(2012)은 후보자 선택 요인, 정당 요인, 정책쟁점 요인, 유권자 요인 4가지로, 정인태(2013b)는 후보자요인, 공약 및 정책요인, 정당요인, 유권자 환경요인, 사회적 쟁점요인 5가지를 각각 투표결정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리해본다면, 투표결정요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는 정당 요인, 후보자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내적 요인은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의 유권자 요인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거별 또는 연구대상 유권자의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갑윤·이현우(2000)는 제14~16대 총선을 대상으로 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연구에서 현직효과와 당적변경, 세대교체¹³⁾, 시민단체 낙선운동 등을 변수로 해 투표결정 영향요인을 분석했는데, 이 결과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후보자 요인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재섭(2009)의 제18대 총선에서 수도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결정요인 연구에서는 경제살리기 기대심리, 한반도 대운하 정책, 뉴타운 재개발 기대심리, 전 정부에 대한 평가, 부동산 세율인하, 정당의 이합집산 등의 요인 중에서 전 정부에 대한 평가(회고투표) 및 경제살리기 기대심리가 투표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슈요인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정인태(2013a)의 제19대 총선에서 부산지역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 연구에서는 공약이나 가두홍보, 공보물 등의 법정홍보매체가 후보자 결정요인에 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13) '세대교체'는 보통 기성세대와 새로운 젊은 세대 등 연령대별 계층 간 교체를 일컬어 쓰이는데, 정치변화에 강조점을 둔 '시대교체'와는 의미를 약간 달리한다. 이갑윤·이현우(2000) 논의에서는 기성정치의 후보자와 젊은 신진후보자간의 경쟁관계에서 유권자 투표결정 변수로 세대교체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 투표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조사를 진행한 이상묵(2011) 연구에서는 여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는 선거평가 결정요인 중 후보자의 내적 요인, 정당 요인을 높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반면 야당후보를 투표한 유권자의 경우 공약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물, 정당요인은 여당후보 투표자에서, 정책 요인은 야당 후보자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동석(2012)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행태 결정 요인을 연구했는데, 이 결과 지지정당이나 정책, 후보자 능력과 더불어 ‘현 정권에 대한 평가 및 심판’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쟁점 이슈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 ‘지역성’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하나이다. 이지선(2007)은 제16대 대선과 제17대 총선을 대상으로 부동층 유권자 투표행태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한 결과 지역기반 정당이 부재한 지역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청 등에서 부동층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재전(2008)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서울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연구한 결과 유권자의 사회 심리적 요인에서 나타난 출신지역에 따른 지역정당 일체감 즉,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투표행태에 있어 연령별, 세대별에 따라서도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확인되고 있다. 정진민(2012)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4개의 연령집단으로 나눈 세대별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결과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주의나 이념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현 정부나 집권당의 정책이나 실적에 대한 평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병근(2013, 49쪽)의 제19대 총선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20~40대 유권자들은 투표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⁴⁾. 또한 50대 이상은 정치적 무관심이, 40대 이하 유권자들의 경우는 낮은 투표효능감이

14) ‘투표효능감’은 유권자 자신이 투표를 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성취감 등을 말한다. ‘정치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병근(2013) 논의에서는 투표효능감의 속성에 대해 “유권자들이 투표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투표불참의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이동규(2013)의 제18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사회학적 특성과 ‘지지후보 결정시기’와의 연관성 연구에서는 이념이나 교육수준, 직업 등에 따라 지지후보 결정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일(2007)은 2007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근대화·동원투표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합리적·심리적 요인을 변수로 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와 기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연구한 결과, 투표참여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도시화의 정도는 투표참여와 관계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심리적 요인 속성에서 ‘투표효능감’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정치적 무관심, 바쁜 일상 등은 투표 불참(기권)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17대 총선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1인 2표제’의 선거제도는 유권자 투표행태에서 ‘분할투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¹⁵⁾. 조진만·최준영(2006)의 17대 총선에서의 ‘1인 2투표제’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요인 및 정당 선택 요인이 각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 2표제의 도입과 정당들 간 이념적 선명성 경쟁으로 인해 지지정당 선택에서는 ‘유권자의 이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19대 총선과 관련하여 투표참여와 정당선택의 예측변인에 대해 연구를 한 서영남(2012)은 특정 직업과 정치이데올로기가 ‘분할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그의 연구에서는 또한 정당선택을 결정하는 요소는 정당별로 서로 다른 결정변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경우 쟁점변인의 영향력이 비교적 컸으며, 민주통합당은 사회적 변인에서 직업요인의 영향이 컸고, 통합진보당은 정치이데올로기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15) ‘분할투표’는 피오리나의 “정책균형 분할투표(split-ticket voting)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일관투표(straight-ticket voting)’와는 반대의 의미다. 유권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서로 다른 정당에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정당간 정책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균형적인 정책 산출을 추구한다는 것이다(Fiorina, 1992; 박천호, 2008, 296쪽 재인용). 즉, 1인의 유권자가 2표 이상의 유효표를 던졌을 때 같은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고 서로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투표를 ‘분할투표’라 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 요인, 이슈 요인, 후보자 요인, 미디어 요인, 그리고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 변인인 유권자 요인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또한 투표결정요인은 선거시점의 상황과 선거유형별, 지역별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하나의 선거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유권자가 어떤 후보에 투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호하는 정당이나 정당일체감, 정치효능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후보자 이미지, 미디어 이용정도, TV토론, 공약·정책, 정치적·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투표행태 관련 연구들은 저마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면서 투표행태 이론 정립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우선 유권자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특정 독립변수 요인을 갖고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많은 반면, 투표행태에 따른 실제 선거결과와 연계해 설명할 수 있는 투표결정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혁남(1997, 90쪽)이 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어떠한 투표행위도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각각의 요인들은 서로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매우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며 이것들의 작용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의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을 적용해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정도 및 변인들 간의 관계 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행태 전반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도 한계는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재·보궐선거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도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방법론의 틀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연구결과를 논의함에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재·보궐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같은 정례적 선거와 달리 투표율 자체가 현저히 낮고 특수한 정치적 상황 내지 지역

적 상황이 개입되어 투표행태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으므로, 정례적 선거와는 다른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정례적 선거라 하더라도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유형의 투표결정요인 측정항목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국단위가 아닌 지역단위인 경우에는 차원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총선에서 특정 지역을 연구범주로 한다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슈 요인’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촉발된 쟁점이나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지역적 이슈 현안에서도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기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투표결정요인으로 제시된 각각의 요인 중 어떤 요인들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공간적 범주가 지역단위인 점을 감안하여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를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확장하면서, 이슈요인의 종합적인 영향정도를 검증하고, 각각의 이슈와 투표행태와의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3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권자의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지지후보 변경)는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미디어 이용시간(지역/중앙 일간지, TV,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선거정보 입수채널(신문, TV, 인터넷, 대인접촉)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4>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투표결정요인(후보자, 정당, 이슈, 미디어 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5>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이슈요인 영향력 평가(지역이슈 VS. 중앙이슈)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위 연구문제들은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투표결정요인 유형으로 제시된 ① 정당 요인, ② 후보자 요인, ③ 이슈 요인(공약·정책·이슈), ④ 미디어 요인 등 4가지 요인항목을 설정하고, 각각의 요인별 속성을 제시함 속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표행태는 유권자의 인구사회학적 속성이나 미디어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이 분석과정을 통하여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도록 하겠다.

<연구문제 1>은 선행연구에서 ‘유권자 요인’으로 명명됐던 인구사회학적 속성인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거나 지지후보를 변경하는 투표행태가 유권자 자신이 내포하고 있는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연구문제 2>는 미디어 변인(이용정도)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투표할 후보 선택 또는 지지후보 변경 등이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시간에 따른 차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3>은 유권자가 선거기간 중 정보를 입수하는데 주로 이용한 매체 등 정보입수 채널유형에 따른 투표행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이는 신문, TV, 인터넷, 대인접촉 등 어떤 매체 또는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느냐에 따라 선거의제나 후보자, 정당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투표행태와 선거정보 입수채널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로 한다.

<연구문제 4>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표결정요인을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속성 유목을 설정하여, 요인별 투표행태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5>는 ‘이슈 요인’의 속성으로 포함되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이슈’ 변인이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슈 요인 속성 유목은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로 구분하여 이슈변인에 따른 유권자 투표행태(투표 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중앙/지역단위 이슈를 동시에 적용해 이뤄지는 이 분석시도는 지금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어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투표행태 연구의 이론적 배경

투표행태(投票行態)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어떤 후보 혹은 정당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최종 선택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행동양태라고 할 수 있다. ‘투표행태’와 ‘투표행위’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투표행태에는 행위의 구체적 표현방식의 의미가 더해진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거의 비슷한 차원으로 설명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논의(김동석, 2012; 김재전, 2008; 서영남, 2012; 전제섭, 2009; 황근, 1993)를 종합하면 투표행태는 “유권자가 선거상황에서 보이는 의사결정 혹은 선택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직접적 투표를 통한 의사표현 외에도 ‘기권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결국 투표행태 연구는 선거상황에서 발생하는 유권자의 선택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영역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즉, 유권자의 투표참여 여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참여했다면 누구를 찍었는지, 투표후보 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등 이 모두가 연구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엇이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부분은 선거결과의 분석 및 해석과 관련된 것으로, 투표행위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는 컬럼비아 학파(Columbia School)의 라자스펠드(Lazarsfeld)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이뤄져 왔다(이동규, 2013; 최미경, 2011). 가브리엘과 버바(Gabriel and Verba)는 유권자 투표행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를 결정함에 있어 나타나는 유형은 첫째, 정책중심의 합리적 투표행태, 둘째, 정당이

데올로기 중심의 합리적 투표행태, 셋째, 후보자 인물중심의 감정적 투표행태, 넷째, 습관 중심의 전통적 투표행태 등을 들 수 있다(Gabriel, Verba, 1963: 이상휘, 2006, 358쪽 재인용).

미국에서 투표행위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적 이론, 사회심리학적 이론, 합리적(경제학적) 선택 이론, 인지 심리학적 이론으로 나누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김동석, 2012; 김재전, 2008; 이강형, 2007; 이동규, 2013; 이상목, 2011; 최미경, 2011; 황근, 1993).

사회학적 이론은 투표행태가 인구·사회학적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유권자가 투표결정을 할 때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에 따라 투표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선거연구 분야에서는 투표행위 연구의 1세대라 할 수 있는 라자스펠드(Lazarsfeld)를 중심으로 한 베렐슨(Berelson), 거뻏(Gaudet) 등 컬럼비아 대학의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에서 최초의 경험적 연구가 이뤄졌다(Lazarsfeld, et al., 1944/2015). 이 이론에 의하면 유권자들은 투표결정에 있어서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지위나 계층, 종교, 교육, 성별 등 동일하게 분류된 집단구성원들과 유사한 선택을 한다(Lazarsfeld, et al., 1944/2015; Berelson, et al., 1954). 즉, ‘집단 소속감’이 투표행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속성만을 갖고 투표행태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 이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이강형(2007, 14쪽)은 유권자의 사회적 계층이 투표행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계층과 관련이 없는 이슈들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 미시간 학파(Michigan School)의 선거이론이다. 미시간 대학의 캠벨(Campbell) 등을 주축으로 해 연구가 시작된 이 이론은 기존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모델에 심리적 성향을 매개변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적 모델로 불린다(이지선, 2007). 특정 지역의 패널조사가 아닌 미국 전 지역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서베이(Survey) 방법의 실증조사를 했으며, 연구결과는 ‘미국 유권자(The American Voter)’로 발간되었다(Campbell, et al., 1960).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한마디로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에 의해 투표결과가 유동

적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시간 학파는 유권자들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Campbell, et al., 1960). 정당일체감이란 사회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이다(이지선, 2007). 정당일체감 또는 정당소속감으로서 집단에의 소속이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며, 이 정당 선호도가 투표결정에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다(조기숙, 1996, 29-30쪽). 정당의 직접적인 입당과는 무관한 정당일체감은 정치에 대한 심리적인 연관성이나 중요도를 제고하여 투표행태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선거의 안정성과 정당의 제도화에 기여하게 된다(Campbell, et al., 1960).

그러나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재전(2008, 34쪽)은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이나 쟁점이슈에 의해 투표하거나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합리적(경제학적) 선택 이론은 투표결정요인으로 사회적 특성이나 심리적 태도에 주목한 이론들과는 달리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경제학적 비용과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의 원칙으로 설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이강형, 2007). 다운스(Downs)의 경제적·합리적 인간관에 착안한 이 이론은 가장 중요한 투표행위의 결정요인으로 정책적 쟁점을 꼽는다(Downs, 1957/2013). 즉, 유권자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쟁점투표를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운스에 의하면, 합리적 인간은 서로 경쟁하는 정당 가운데 자신에게 실제로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당을 우선 고려한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현 시점에서 정부정책을 평가하거나 다음 선거까지 정부정책 형성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 투표결정을 한다고 했다(Downs, 1957/2013, 351-354쪽). 결국 유권자는 자신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정책을 제시한 미래의 정당 혹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전망투표를 한다는 것이다. 조기숙(1996, 47쪽)은 합리적 선택이론의 시각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정책을 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행위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논의와 관련해 피오리나(Fiorina, 1981)는 과거지향적인 유권자는 투표를

함에 있어 집권 정당에 대한 과거 업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징벌 또는 보상을 하는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를 한다고 했다. 회고적 투표란 유권자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과거와 비교하여 판단하면서 불만족 요소가 크면 현직에 있는 인물이나 집권당 후보를 지지하고 않고, 반대로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크면 현직 인물이나 집권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이의 연구 역시 경제적 상황이 나쁘면 집권당을 심판하기 위해 도전자에게 표를 주고, 경제적 여건이 좋으면 집권당을 표로 보상한다는 단순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다(조기숙, 2013, 74쪽; 최미경, 2011, 85쪽). 이러한 회고적 투표행태는 정당일체감과 관련이 있다. 정당일체감에 의해 투표를 한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정당의 정책적 대안을 매번 수집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소요되었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합리적 행위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상목, 2011).

그러나 이 합리적 선택이론 역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이를테면 쟁점투표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정당이나 후보자 요인에 의해 투표하는 경향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면서, 경제학적 관점의 연구의 경우 경험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지선(2007)은 유권자가 정책적 대안을 인지하고 이를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기 위해선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이슈의 쟁점이 항상 부각되어야 하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인지심리학적 이론은 외부의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자신의 기존 관념과의 상호작용 속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창조해 가장 합리적인 투표 결정을 한다는 가정 하에 출발하고 있다(황근, 1993). 이 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초하지만, 이전 논의와는 차이가 있다. 최미경(2011, 85쪽)은 “경제적 의미에서 합리성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일률적인 행위를 예측하는 데 반하여 인지이론은 결정과정상의 인지적인 한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차별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고 했다. 즉, 어떤 외부상황 요인에 의해 모든 유권자가 일률적인 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카마인과 스티imson(Carmines and Stimson)은 쟁점투표를 ‘쉬운 쟁점’과 ‘어려운 쟁점’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쉬운 쟁점’은 정책목표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유권

자들이 이해하기가 용이한 반면, ‘어려운 쟁점’은 일종의 정책수단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장시간 정치현안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Carmines, Stimson, 1980: 조기숙, 1996, 40쪽 재인용). 보통의 유권자들은 쉬운 쟁점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 반면, 어려운 쟁점투표는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관심이 요구되어 실행이 어려운 점이 있다. 조기숙(1996)은 쟁점투표가 갖는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개인의 인지능력에 따른 뚜렷한 차이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인지심리학적 이론에서는 유권자들이 일시적인 감정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제기되고 있다(김재전, 200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사회학적 이론은 ‘개인이 소속된 사회집단의 특성’, 사회심리학적 이론은 ‘정당 일체감’, 합리(경제)적 선택이론은 ‘정책적 대안’, 인지심리학적 이론은 ‘유권자의 인지과정을 통한 종합적 판단’을 각각 투표결정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투표행태에 관한 각 이론은 선거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토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권자 투표결정 요인을 규명함에 있어 어느 하나의 이론만을 갖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거시점의 정치적·사회적 상황, 그리고 선거유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각 투표행태 이론에 근거하여 요인별 다양한 속성을 살펴봄 속에서 투표결정 요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투표행태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보통 선거전이 펼쳐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선거기간 동안 수많은 변수들이 출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변수는 돌출적으로 등장하였다가 금세 사라지기도 하고, 또 어떤 변수는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선거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선거의 변수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청렴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쟁점 이슈, 공약, TV토론에서 보여주는 후보자 이미지, 여론조사 결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정당과 후보자 간 차이, 공천갈등 등 정당 내부의 문제, 정당 간 정치적 대립, 또 국내 정치·사회·경제적 상황 등에서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 유권자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적 요소도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선거에서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변인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미디어나 유권자 의제 쟁점으로 부상하여 선거관을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 우위의 쟁점 속에 묻혀버리는 변인들도 있다. 선거관세가 박빙의 상황에서는 미세한 변수 하나가 승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는 어떤 변인이 유권자에게 더 큰 영향을 주게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에 따라 변인들의 영향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유권자의 정치적 신념이나 출신지, 연령, 직업, 소득,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도 선거쟁점의 인지 여부나 해석하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 기존 연구들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변인들 중에서 어떤 것이 유권자 투표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투표결정 요인들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속성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제2절에서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투표결정 요인을 ① 정당 요인 ② 후보자 요인 ③ 이슈 요인 ④ 미디어 요인 등의 ‘외적 요인’과, ⑤ 유권자 요인의 ‘내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들의 세부 속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정당 요인

‘정당 요인’은 후보자의 소속정당 내지 정당 일체감 등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 논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소속정당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투표할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관심 있는 정치인이 소속된 정당, 혹은 정당이 표방하는 이념 등의 요소가 투표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투표행태 연구에서 정당 요인의 속성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재섭(2009)은 정당 요인을 정당 인지도, 정당의 이념, 정당 일체감, 정당의 이합집산(분당, 통합)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상목(2011)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 고려, 정당의 역할 중시, 내가 선호하는 정당, 정당에 소속한 정치인에 관심, 정당을 통해 후보자 정보 입수 등 5가지를 유권자 투표행태의 정당요인 측정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정인태(2013b)는 후보자의 정당, 후보자 정당의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 후보자의 정당 내 영향력을 정당요인의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황근(1993)은 제14대 대선 관련 유권자 투표행태를 연구하면서 정당관련 변인으로 야당집권, 다수당 집권(여당집권), 새로운 정당집권, 획기적인 공약, 이미지 관리 잘함, 신한국 건설, 행동하는 양심 등 12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동안 진행된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심리적 소속감을 일컫는 ‘정당 일체감’에 주목해 왔다. 캠벨 등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이란 정당에 실제로 입당하는 것과는 무관한 심리적인 연대감 또는 소속감을 의미한다. 정당 소속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후보 선택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적 경향을 보인다(Campbell, et al., 1960).

미국의 초기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 후보자 평가, 이슈 세 가지 변수 중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당 요인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는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갑윤·이현우(2000)는 제14대부터 16대 총선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당요인이 후보자 요인보다 월등히 영향력이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정당소속감이란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속성이

있다”고 하였다.

조진만·최준영(2006)은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투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후보자만 선출하는 단일 투표제 때와는 달리 선호정당 경향 및 정치쟁점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선호하는 정당’이 투표결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정당투표의 지지정당을 결정함에 있어 지역균열¹⁶⁾, 이념, 세대, 탄핵쟁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병근(2013)의 제19대 총선 유권자 투표참여 영향 요인 연구에서도 지지정당의 존재 여부, 후보 또는 정당과의 접촉, 투표 효능감, 투표 의무감 등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정당 요인’은 연고주의 혹은 지역주의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호남지역에서는 야당 후보,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보수정당 후보에 대한 몰표 현상, 수도권 등에서는 소위 ‘정당 바람’¹⁷⁾이 선거관세를 좌우하는 현상 등은 유권자들의 최종 투표후보 선택은 결국 ‘정당’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2004년 제16대 총선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탄핵’ 등과 같은 시대적 상황은 ‘정당 요인’이 투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재섭(2009)의 제18대 총선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특정지역 출신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소속정당, 특히 지역연고 정당 및 정당일체감에 따른 지역주의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논의를 보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두드러진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권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투표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영남권 출신 유권자들은 한나라당 후보선택이 높게 나타났고, 호남권 출신 유권자들의 선택은 민주당 후보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당요인이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정당요인 그 자체의 영향력은 초기 투표행태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만큼 크지 않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권혁남(1997, 81쪽)은 “정당일체감이 이슈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반

16) 조진만·최준영(2006) 논의에서 “지역균열”은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배타적인 지역 정서를 말한다.

17) ‘정당 바람’은 정당 간 대립국면에서 특정 정당으로 유권자의 지지가 쏠리는 현상을 말하며, 이는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차원 보다는 선거당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이나 특정 이슈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로 이슈가 정당일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가 나타났고, 유권자들은 후보가 소속된 정당보다는 이슈나 후보 이미지를 중심으로 투표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정파성(partisanship)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당 역할의 감소와 유권자의 투표행위, 그리고 선거캠페인의 변화로 인해 정당요인을 제1의 투표결정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준웅(1998)은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과 잦은 명칭변경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각 정당이나 정파에 대해 내면화된 당파적인 태도 형성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¹⁸⁾.

반면, 조기숙(1996)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인물본위투표’를 한다는 주장은 방법론적인 오류에서 기인하며, 오히려 ‘정당본위’의 합리적 투표를 해왔다고 주장한다.

한편 제20대 총선에 즈음하여 제주지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선택기준은 <표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인물·능력·평판(32.4%), 정책·공약(29.9%), 소속 정당(26.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제주도 선거구별 제20대 총선 후보자 선택기준¹⁹⁾

단위: %

후보자 선택기준	인물능력·평판	정책·공약	소속 정당	혈연·학연·지연 후보자와의 관계	기타·잘모름
제주시 갑	32.4	29.9	26.3	0.8	10.6
제주시 을	31.7	30.3	26.8	1.6	9.6
서귀포시	38.8	28.1	19.6	1.6	11.9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정당 요인’은 투표결정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그 속성은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당 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정당 요인은 그 속성상 이슈 요인이나 후보자 요

18) 정당일체감이 예전과 비교하여 약화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이갑윤·이현우(2000)도 정당의 불안정성 문제를 들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당 창당을 급조하는 경우가 많고, 정당 존속기간도 짧고 불안정해 정당소속감이 약화되고 영향력 또한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19) 한길리서치 2016년 4월7일 발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KCTV제주방송, 헤드라인제주, 제주의소리,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공동의뢰).

인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투표결정 과정에서의 정당 요인의 영향 정도는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당요인의 독립적 영향력 보다는,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후보자 요인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 개인의 이미지나 능력 등의 요소가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 논의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할 때 정당이나 이슈쟁점 보다는 후보 개인의 인물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투표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세부속성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유권자들마다 후보자 평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후보자가 지니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후보자 요인에 대한 세부속성 논의의 준거틀이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보자 요인 속성 논의를 보면, 송건섭(2015)은 후보자 속성을 인물(성품, 태도, 교육, 경력, 자질, 참신성, 신뢰성 등), 외부(출신지역, 혈연·학연), 공약, 후보능력(법규수행능력, 지역발전에 대한 능력), 후보평판 요인(이웃의 조언, 주민들의 평판) 등으로 분류하였다. 서상국(2010)은 후보자 요인의 속성을 매력·인기, 인지도, 도덕성·신뢰성, 능력·자질, 이념성향, 지역발전에 기여, 유권자와 소통, 정치경력, 도움을 받을 수 있음, 후보자의 소속정당, 후보자의 출신지역·거주지 등으로 제시하였다. 정인태(2012)는 후보자의 성격·태도·성품, 도덕성·정직성·청렴성, 학벌 및 교육정도, 현재 직업 및 직함, 지도력·추진력, 전문지식, 지역발전 능력, 후보자 업적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상목(2011)은 후보자의 민주성, 참신성, 신뢰성, 교육, 경력, 자질, 인물, 외모, 말투, 태도, 이미지, 매력, 지역발전기여도, 선거법 준수여부, 출신지역 및 혈연·학연, 주민 및 이웃 평판 등으로 분류했다. 김동석(2012)은 후보자 선택요인으로 후보 이미지, 역량, 정치이념을 꼽았다²⁰. 정성

호(2003)는 후보자 자질, 후보자 신뢰감, 후보자 매력, 후보자 활력, 후보자 따뜻함, 서민 이해정도 등을 후보자 개인적 자질 유형 속성으로 설명하였다²¹⁾.

이러한 논의들을 보면 후보자 요인의 속성은 후보자의 외적 이미지에서부터 정치신념을 포함한 내적인 요소, 그리고 대외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후보자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후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속성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캠벨(Campbell, et al., 1954) 등의 ‘정당, 이슈, 후보 이미지’ 3분법 개념을 통하여 처음 제기되었다. 그러나 초기연구에서는 정당과 이슈에 비해 후보자 요인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스토크스(Stokes, 1966)가 매혹적인 후보자의 출현은 유권자로 하여금 지지정당을 바꾸도록 하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다시금 크게 대두되었다. 이후 켈리와 마이러(Kelly & Mire)는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후보선택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투표결정요인은 후보에 대한 평가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Kelly, Mirer, 1974: 권혁남, 1997, 84쪽 재인용).

그동안 이뤄진 많은 국내 연구에서도 ‘정당’이나 ‘정책’과 더불어 ‘후보자 요인’이 유권자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황근(1993)은 제14대 대선에서 나타난 투표행태 연구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식의 구성요소를 후보자의 개인적인 이미지, 능력 및 자질, 정책과 관련된 평가, 정당 및 기타의 평가로 분류하여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결과 후보자의 자질, 경력, 능력평가 요소가 정책이나 정당 등 다른 요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후보자의 개인적 속성(이미지)이라는 사실을 밝

20) 김동석(2012, 16쪽) 논의에서 후보 이미지는 그 후보가 지역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지, 도덕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얼마나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지 등을 포함하며, 후보자 역량에서는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지, 정치 경력이나 경륜은 또 얼마나 있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후보의 정치이념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소속된 정당이 어디인가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21) 이 외에도 후보자 속성과 관련한 논의는 많은데, 송건섭·이곤수(2011)는 투표결정요인을 정당 요인, 공약요인, 외부요인, 인물요인, 후보평판 요인, 후보능력으로 분류한 후, 이중 ‘인물 요인’ 속성을 후보자의 교육정도, 경력, 자질, 민주성, 참신성, 신뢰성, 인물, 성품, 태도 등으로 분류하였다. ‘후보능력’에는 법규수행능력, 지역발전에 대한 능력, 후보자능력에 대한 언론평가 등을, ‘후보 평판’에는 후보자에 대한 주민들의 평판, 후보자에 대한 이웃의 조연을 포함하였다.

이갑윤·이현우(2000)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요인 영향력 연구에서 후보자 요인으로 측정될 수 있는 변수로는 현직효과, 당적변경, 세대교체, 시민단체 낙선운동의 효과로 설정했다. 현직의원의 높은 인지도 등이 투표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직효과’나, 후보자의 ‘당적변경’ 등을 후보자 요인으로 설정한 것이 다른 연구와는 차별화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혀냈다²²⁾. 이 개인적 속성들은 추상적이며 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정책과 관련한 평가 요소나 기타의 요소들은 단기적이며 자주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웅(1998)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 캠페인을 배경으로 후보 이미지가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및 투표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후보 이미지는 유권자의 투표결정 등 태도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김재전(2008)의 2006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기록, 학력, 경력 등의 정보공개 자료들도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후보자의 경력’을 가장 중요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국(2010)은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 경주시 사례 연구에서 후보자 속성변인 중에서도 도덕성·신뢰성, 능력·자질, 지역발전에 기여 순으로 영향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목(2011)의 2011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투표결정요인으로 후보자의 말투, 외모, 태도, 신뢰성, 참신성, 인물 등을 포괄하는 후보자의 내적요인에 대한 평가의 경우 여당 후보 투표자에서 높게 형성되었다. 즉, 여당 후보를 투표한 유권자들은 투표결정 과정에서 후보자의 내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높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권자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투표결정요인 논의에서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은 국내 정치상황의 변화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다. 변동구(2004, 7쪽)는 우리나라 정치문화가 인물투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연, 혈연, 학연 등과 같은 연고주의 및 후보자 개인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생겨나면서 정당 보다는 인물에 비중을 두는 투표행태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갑윤·이현우(2000, 150-151쪽)는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이후 민주주의 제도가 성숙·

22) 황근(1993)의 연구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능력’ 평가항목은 정치적 경륜 풍부, 개인적 자질 우수, 추진력과 실천력, 경제운영 능력 경제실무능력, 민주화에 기여, 참모진의 우수성, 개인적 풍부한 사회경험, 지식이 풍부 정치적 결단력, 학력, 위기대응 능력 등 12가지로 제시되었다. 또한 ‘개인적 속성’(이미지) 평가항목은 건강, 품성, 참신, 청렴, 포용력, 소신, 신념, 깨끗한 이미지, 달변, 친근감 있다, 잘 생겼다, 돈이 많다, 동향사람, 존경스럽다, 낙천적이다, 자상하다, 성장과정이 좋다, 성실하다 부인이 내조를 잘할 것이다, 솔직하다, 온건하다, 진보적이다 등 22가지로 분류하였다.

발전되면서 기존의 정당 간 노선 차이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정당의 잦은 이합집산 등으로 정당 간 차별성이 약화되면서 후보자 요인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후보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송건섭(2015)의 지방선거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후보자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공약 요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정성호(2003)는 TV토론에 나타난 메시지가 유권자의 해석과정을 거쳐 후보자에 대한 태도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유권자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후보자 요인의 속성항목은 매우 다양한 차원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후보자의 자질, 경력, 학력 등, △후보자의 참신성이나 이미지,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후보자의 외모, 말투, 태도, △후보자의 출신지역, 혈연, 학연,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이뤄진 연구에서는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 이미지 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유권자 요인 속성항목을 적용하여 20대 총선의 전반적인 투표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봄과 동시에, 후보자 요인에서는 어떤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 이슈 요인

‘이슈 요인’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과 정책, 정치적·사회적 쟁점 이슈 등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슈는 그동안 유권자의 투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슈요인 논의는 선거과정에서 공약·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쟁점이 등장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나 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며, 이를 투표 선택기준으로 삼을 것이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현우(2011, 61쪽)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투표결정 방법 중 이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

것이 가장 합리적인 투표결정 방법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투표결정요인 연구에서 이슈 요인의 속성은 크게 ‘공약·정책’과 ‘쟁점이슈’(또는 선거이슈)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²³⁾. 공약·정책은 선거 공보물의 공약, 정당이나 후보자가 발표하는 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쟁점이슈 또는 선거이슈는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의나 논쟁 따위의 중심이 되는 쟁점 사안들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각각 정의할 수 있다²⁴⁾.

미국에서 1960대 이후부터 유권자들은 정당 일체감보다도 이슈나 후보자 이미지를 중심으로 투표한다는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연구에서도 이슈요인의 영향력이 검증되고 있다. 김동석(2012)의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결정요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서 ‘복지문제 등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현정부 평가 및 심판’과 ‘후보들의 인물경쟁력’ 순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정책 및 이슈요인의 영향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전재섭(2009)은 제18대 총선 수도권 유권자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유권자들이 지지정당을 변경한 요인이 ‘이슈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의 연구를 보면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으로 지지정당을 바꾸었는데, 그 원인은 ‘경제 활성화’, ‘부동산 세율인하’, ‘뉴타운 개발’, ‘현 정부가 싫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송건섭·이근수(2011)는 2002년, 2006년, 2010년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유권자 투표행태를 연구하였는데, 이 결과 2002년과 2006년 선거에서는 공약>인물>정당 순으로, 2010년 선거에서는 공약>인물>정당 순으로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이현우(2011)의 제5회 지방선거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선거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천안함 침몰’, ‘무상급식’, ‘4대강 개발’ 등의 전국

23) 이슈요인과 관련한 측정항목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해 제시되고 있다. 김동석(2012)은 ‘정책쟁점요인’, 송건섭·이근수(2011)는 ‘공약요인’, 이상목(2011)은 ‘공약·정책 요인’, 정인태(2012)는 ‘정책 및 공약 요인’, 정인태(2013b)는 ‘정책·공약’과 ‘사회적 쟁점요인’, 이현우(2011)와 황근(2001)은 ‘선거이슈’, 전재섭(2009)은 ‘정책쟁점·사건이슈 요인’, 정인태(2013b)는 ‘정책·공약’과 ‘사회적 쟁점요인’으로 설정하였다.

24) 예를 들어 ‘부풍’이라든지, ‘공천 갈등’, ‘정권 심판론’, ‘현역의원 교체론’ 등과 같은 유형은 쟁점이슈(또는 선거이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5) 송건섭·이근수(2011) 연구에서 투표결정요인 항목은 정당요인, 인물요인, 공약요인, 외부요인, 후보능력, 후보평판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중 공약요인의 속성으로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일치성’, ‘후보자의 선거공약(정책)’을 제시하였다.

적 이슈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진만·최준영(2006)의 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연구에서는 탄핵 쟁점이 유권자들의 지지정당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민(2012)의 2010년 지방선거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지역주의나 정치성향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정부나 집권당의 정책 또는 실적에 대한 평가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투표선택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목(2011)은 2011년 4월 성남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이 결과 여당 후보 투표자들은 인물과 정당 요인을, 야당 후보 투표자들은 정책요인을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서 이슈요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지선(2007, 55쪽)은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의 부족을 감안하면, 정부평가 및 정책·이슈에 따른 투표이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권혁남(1997, 82쪽)은 “유권자들이 이슈를 중심으로 자신의 선호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고, 정보가 풍부하고,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어렵고 정교한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²⁶⁾. 이는 이슈중심의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슈 요인은 후보자 요인이나 정당 요인과의 밀접히 연관되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 정책, 이슈에 대한 입장은 유권자의 지지정당 선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이슈 요인은 선거공보물의 공약, 후보자나 정당에서 발표하는 각종 정책, 지역현안이나 갈등이슈, 정치적·사회적 쟁점 이슈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또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중앙 정치이슈와 지역구 이슈가 모두 나타날 수 있어 쟁점이슈의 속성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

26) 이슈 중심의 투표행태 연구자들은 유권자를 이성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 이상적인 민주시민으로 인식하였다(권혁남, 1997).

27) 실증조사 과정에서 이슈 요인의 항목 설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온다. 어떤 속성에 강조점을 두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약·정책’을 강조할 경우 조사대상자들은 선거공보물의 공약 내지 후보자나 정당에서 발표하는 정책으로 한정된 개념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슈’를 강조할 때에는 후보자의 공약·정책 등을 제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화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²⁸⁾. 그러나 기존에 이뤄진 실증연구의 방법론을 살펴보면,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를 동시에 적용해 투표행태 및 투표결정 요인을 규명한 연구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슈 요인의 속성 중 ‘정치적·사회적 쟁점’ 항목을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로 구분하여 쟁점이슈에 대한 논의의 폭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4. 미디어 요인

미디어 요인은 유권자들이 선거정보를 입수하는 매체 유형과 내용, 접촉시간 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앞서 논의된 정당·후보자·이슈 요인 등의 내용은 결국 미디어를 통해 유권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미디어 요인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유권자들은 미디어를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정보 인지과정을 거치며 가장 합리적인 투표결정을 하게 된다. 선거 시기 후보 진영에서 선거캠페인 방법으로서 미디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정치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미디어 관련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선거에서 나타나는 미디어의 효과 내지 영향력에 관한 것이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한다면 첫째, 미디어 요인의 속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TV토론과 여론조사 보도, 그리고 선거뉴스 보도, 정치광고 등이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둘째, 미디어 이용량(이용시간)과 미디어 신뢰도, 그리고 선거정보 입수 채널유형 등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 기존 연구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이 미디어

28) 황근(2001, 29쪽)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앙 이슈와 지역 이슈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도 하지만 상호 대립적일 수도 있고, 정책 쟁점을 두고 정당 간 치열한 경쟁양상과 같은 중앙이슈가 부각될 경우 지역 이슈는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9) 후보들의 매스미디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설명한 이론으로는 페트로식(Petrocik)의 ‘이슈 소유권’을 들 수 있다. 뉴먼(Newman)에 따르면 ‘이슈 소유권’이란 선거캠페인 전략의 하나로써, 광고주가 상품마케팅 전략에서 신문이나 TV 등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상품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처럼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에게 이로운 이슈를 직접 홍보하여 그들을 선거일에 투표소로 끌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ewman, 1994/2000, 154-155쪽).

어 이용과 투표행태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표 4>와 같이 TV토론이나 선거보도, 여론조사, 정치광고 등 미디어 요인의 세부속성을 갖고 투표행태나 정치참여, 유권자 인지 및 태도변화를 살피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태 관련 연구³⁰⁾

연구자	연구주제
고영철·최낙진(2007)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제주도 주민투표)
권혁남(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단행본)
김관규(2008)	“18대 총선 대학생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동”
김춘식(2013)	“선거뉴스와 미디어선거캠페인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남인용(2013)	“정치효능감, 미디어이용과 정치참여와 후보자 이미지”
송종길·고삼석·박상호(2010)	“미디어 신뢰도와 정치행태-정치신뢰, 부정주의, 정치효능감”
송종길·박상호(2005)	“정치적 불만, 미디어 이용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신재선(2012)	“대학생의 미디어이용이 정치효능감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민태은(2015)	“온라인 미디어 활용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이소영(2012)	“4.11총선과 SNS 선거캠페인”
이수범(2001)	“방송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
최삼경(2011)	“대학생의 미디어이용·신뢰도와 정치태도·참여”
허일수(2011)	“청소년과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 행태와 정치참여: 뉴미디어 이용, 정치성향, 정치효능 중심”

내용별로는 미디어 이용정도 및 미디어 신뢰도, 또는 SNS 등의 변인에 주목한 연구(김관규, 2008; 김춘식, 2013; 남인용, 2013; 송종길·고삼석·박상호, 2010; 송종길·박상호, 2005; 신재선, 2012; 민태은, 2015; 이소영, 2012; 이수범, 2001; 최삼경, 2011; 허일수, 2011)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TV토론이 유권자 태도 혹은 인지 변화 및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들(권혁남, 2006; 송종길·박상호, 2009; 정성호, 2003)도 있다. 제주도지사 소환 주민투표에서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도 있었다(고영철·최낙진, 2007).

선거 뉴스보도 및 여론조사, 혹은 선거판세 인식이 가능한 매체 이용 등이 투표에 미친 영향(권혁남, 2009; 김용호·김경모, 2000; 김용호, 2009; 박태서, 2010;

30) 이 표의 논문리스트는 미디어 이용이 투표행태 또는 정치참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논문 중 이론적 논의나 연구방법에 있어 본 연구와 관련성이 큰 논문들을 일부 추려내어 정리한 것이다.

반현·최원석·신성혜, 2004; 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이호성, 2008; 임양준, 2013; 황근, 2001), 그리고 정치광고의 영향(김인경·박진우, 2008; 민영, 2006; 이준호, 2014) 등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표 4. TV토론, 선거보도, 여론조사, 정치광고 요인 투표영향 연구

연구자	연구주제
권혁남(2006)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 (단행본)
권혁남(2009)	“텔레비전의 15대 16대 대통령선거 보도 비교”
김용호·김경모(2000)	“선거관련 매체이용 선거판세 인식 전략적 투표행위 영향”
김용호(2009)	“선거판세 인식과 전략투표 행동의 매체이용 효과”
김인경·박진우(2008)	“옥외 정치광고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영(2006)	“정치광고의 이슈현저성과 후보자 선호도”
박태서(2010)	“TV뉴스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양식”
반현·최원석·신성혜(2004)	“유권자 투표선택과 뉴스미디어 접화효과”
송종길·박상호(2009)	“TV토론이 유권자 태도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송현주·김현석·이준웅(2008)	“대통령후보경선 여론조사보도와 인지평가 정서반응 정치행동 성향”
이준호(2014)	“정치광고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호성(2008)	“18대 총선과 지역 언론의 보도패턴-폭로저널리즘과 여론조사보도”
임양준(2013)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미디어 효과”
정성호(2003)	“TV토론이 유권자 인지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인태(2012)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홍보매체의 효과 및 선거PR캠페인 전략”
황 근(2001)	“방송의 선거 이슈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선행연구들의 미디어 영향성 논의를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유형에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관규(2008)는 제18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동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선거정보 입수채널의 유형을 인터넷, 신문기사, TV프로그램, 친구나 주위사람 등 4가지로 분류해 실증조사를 하였는데, 이 결과 지지후보나 정당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받은 영향 정도는 신문기사, TV프로그램, 인터넷, 친구 또는 주위사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1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행태와 미디어와의 연관성을 검증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선거정보 입수채널 중 TV, 신문, 친구·주위 사람, 인터넷, 공약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폰 순으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목, 2011).

이러한 결과는 1992년 제14대 대선의 투표행태 연구에서 TV나 신문의 선거보

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변인의 영향력이 적게 평가되었던 황근(1993)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의 원인은 1990년 이후 미디어의 발달과 매체 유형의 다양화, 특히 2000년대 인터넷 및 모바일, SNS 대중화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이용정도, 신뢰도 등도 유권자의 태도 내지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디어 매체 유형을 보다 세분화해 제19대 총선에서 미디어 이용이 정치효능감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신재선(2012)의 연구 결과에서는 미디어 이용에 따른 지지 후보 결정과 정당 결정에 차이가 나타났다. 후보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미디어 유형은 TV, 인터넷, 친구 및 주위사람, 신문, SNS, 팟캐스트 순이었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정도(이용시간)와 정치효능감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디어 이용시간이 많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식(2013)의 연구에서는 TV와 신문의 정치광고, TV합동토론회, 후보자 개인 홍보물 등을 많이 접한 유권자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TV와 신문의 선거뉴스를 활발하게 이용할수록 사실적 수준의 정치지식과 정책지식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다만 선거뉴스 노출 자체는 정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³¹⁾. 허일수(2011)의 연구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포털 뉴스를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직접적인 투표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체별 이용시간에 따른 정치효능감의 차이 분석에서는 인터넷 이용시간이 많아질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종길·고삼석·박상호(2010)의 제17대 대선에서 미디어 신뢰도와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신문의 신뢰도는 투표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인터넷 신뢰도는 정치효능감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삼경

31) 고영철·최낙진(2007)은 제주도 주민투표에서 나타난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정도가 정책숙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평가적 태도는 결국 투표행위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수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미디어에서 강조한 보도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정치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디어 이용도와 정치적 관심도의 인과관계에서는 신문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의 이용은 정치적 효용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현·최원석·신성혜(2004)는 제17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과 뉴스 미디어의 점화효과(priming effect)³²⁾에 관해 연구하였는데, 이 결과 뉴스 미디어 이용량에서는 TV뉴스와 신문 이용이 유권자의 투표정당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총선 이슈를 갖고 미디어의 점화효과를 검증한 결과 TV뉴스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미디어 고이용자 집단의 경우 TV뉴스에서 보도한 선거 이슈의 현저성과 투표선택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TV뉴스의 이슈보도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반면 선거뉴스의 공정성 등과 같은 보도행태에서는 투표행태와의 직접적 영향정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재전(2008)의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언론의 보도행태(공정, 불공정)의 경우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³³⁾.

미디어 요인 중 TV토론의 경우에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2003)의 제16대 대선 TV토론 연구에서는 토론에서 전해진 메시지가 유권자의 해석과정을 거쳐 후보자의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는 연구결과를 통하여 “TV토론은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 유권자의 인지변화와 태도 형성에 중요한 매개체이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송종길·박상호(2009)도 제17대 대선 TV토론의 투표행위 영향을 연구한 결과, TV토론을 시청한 유권자에서 지지후보 선택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고, 후보자별 지지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론조사 보도도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임양준(2013)은 제19대 총선 여론조사 보도의 제3자 효과³⁴⁾ 인식에 관한 연구 결

32) 이 연구에서는 피조사자들이 뉴스에서 강조한 이슈에 근거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점을 발견, 미디어에서 강조된 특정 이슈들이 정치인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상을 점화효과(priming effect)로 설명하였다.

33) 그럼에도 선거보도 행태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수범(2001)은 ‘방송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에 관한 연구 논의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선거 보도 양식에 따라서도 유권자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과, 여론조사 보도에서 자신과 타인, 자신과 친한 친구 대학생들 간의 제3자 효과가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수용자들은 미디어 총선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 자신보다 친한 친구들이 더욱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고 있었고, 친한 친구들보다 사회적 거리가 먼 타인이 미디어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광고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준호(2014)는 정치광고가 정치효능감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연구한 결과 정치광고에 대한 노출은 정치효능감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광고 유형 중 이미지 광고는 이슈광고에 비해 노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영(2006)의 연구에서는 정치광고에서 언급된 이슈가 정당속성과 일치할수록 수용자의 이슈현저성 인식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밖에 남인용(2013)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연구에서는 신문과 라디오, 포털, SNS, UCC 등 매체유형에 따른 후보자별 이미지 영향과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민태은(2015)과 이소영(2012)은 SNS 활용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권혁남(2006)의 논의를 보면, 선거단위가 광범위한 대선에서는 텔레비전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나, 선거단위가 작은 지방선거에서는 미디어의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고 한다³⁵⁾. 또한 대선의 경우 ‘TV토론’과 ‘TV연설’의 영향력이 컸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TV뉴스 보도’의 영향력이 더 컸다고 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투표결정요인으로서의 미디어 요인은 TV토론,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 언론의 선거여론조사 결과, 정치광고 등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선거정보의 입수채널 유형 등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투표결정에 있어 미디어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함과 아울러,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34) 제3자 효과(Third person effect)는 미디어의 효과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과대평가하는 지각적 편향을 설명하는 가설이다(Davidson, 1983: 임양준, 2013, 186쪽 재인용).

35) 권혁남(2006)의 이 논의에서는 지방선거 단위에서 미디어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별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후보자와 유권자 간 대면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선의 경우 미디어가 일종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 기회가 많고 주변의 평판이나 후보자에 대한 정보 입수 통로가 다양해 미디어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입수 채널유형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검증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선거정보 입수채널의 유형은 기존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친구·주변사람 등으로 세분화시키고, 텔레비전의 경우 또한 지상파와 중편방송으로 분류해 논의를 확장시켜보고자 한다³⁶⁾.

5. 유권자 요인

유권자 요인은 유권자의 사회학적 속성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앞서 살펴본 투표결정요인 중 정당 요인, 후보자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을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유권자 요인은 유권자 자신의 ‘내부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나 지지정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별, 연령, 거주지, 학력, 직업, 종교, 소득수준, 정치적 이념 등의 개인적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투표행태 논의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가운데 하나로, 연구자들마다 유권자의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 변인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 왔다.

그동안 이뤄진 많은 연구에서는 유권자 요인의 다양한 속성변인 중에서 연령, 거주지, 학력, 소득수준, 유권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 내지 이념 등에서 투표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주요 연구사례를 보면, 전재섭(2009)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행태 연구 결과 유권자들의 인구통계 사회적 특성인 연령, 거주지, 주거형태, 종교, 학력, 소득수준, 이념(보수, 중도, 진보)에 따라 투표행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동규(2013)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결정시기와 투표행태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라,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직업에 따라, 지지정당에 따라, 정치이념에 따라 투표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36) 유형을 세분화하는 것은 뉴스전달에 있어 지상파방송과 중편방송 간에 뉴스메시지의 구성이나 논점, 진행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이수범(2001)은 ‘방송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 연구 논의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선거보도 양식에 따라서도 유권자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37) 전재섭(2009)은 정당·후보자·이슈 요인을 ‘객체적 요인’, 유권자 요인을 ‘주체적 요인’으로 구분하며, 후보자 선택 판단의 주체적 행사에서는 유권자의 사회적 특성이 매우 중요시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이념이나 가치체계가 다르게 되고, 인지역량에서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밝혀냈다. 이 연구에서는 다만 거주지 변인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인태(2013a)의 연구결과에서는 많은 변인들 중에서도 ‘거주지’를 포함하여 연령, 정치이념 등에서 투표행태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김동석(2012) 연구에서는 연령별 변인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 후보나 정당, 젊을수록 진보적 후보나 정당에 투표하는 점이 검증되었다.

지병근(2013)의 제19대 총선을 배경으로 한 투표효능감 및 투표참여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효능감과 투표참여 의무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소득과 학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중근(2011)은 유권자 이념 성향에 따른 정당투표 관계 연구를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인가, 중도적인가, 진보적인가에 따라 투표행태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편, 유권자 출신지역에 따른 특정후보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재한(2011)은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연구에서는 거주지역(도시, 농촌)에 따른 연령별 투표율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즉, 농촌지역에서는 고령층이, 도시에서는 젊은 층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목(2011)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으나, 유권자 정치성향에 있어 보수적 성향 유권자들은 여당 후보에, 중도나 진보적 성향 유권자들은 야당 후보에 투표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 평균연령은 여당후보 투표자가 51.87세로 가장 높았고, 야당 후보 투표자는 40.60세, 투표를 하지 않은 ‘미 투표자’는 39.84세로 가장 낮았다.

이현우(2011)의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고려할 때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세종시 순으로 더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이슈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층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한나라당 지지자들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별, 선호 정당에 따라서도 투표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김재전(2008)의 지방선거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연령,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에 따라서도 유권자 정치성향의 표출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유권자에서 진보적 성향이 두드러지게 많았으며, 중졸

이하 유권자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201만원~300만원에서 진보적 성향 유권자가 많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유권자 요인의 인구통계학적 속성변인 가운데에서도 연령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출신지역 등에 따라 투표행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의 경우 선거전에서 ‘세대교체론’과 같은 대립구도 프레임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변인이기도 하다. 앞서 기존연구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호남지역 출신과 영남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특정지역 후보 표 쏠림 등 출신지역도 후보자 요인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속성변인 중에서는 보수적, 중도적, 진보적 등으로 분류되는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이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성향에 따른 투표경향은 정당 간 대결이 이뤄지는 총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유권자 요인은 그 특성상 독립적으로 투표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외부적 자극’이라 할 수 있는 정당요인, 후보자요인, 미디어요인, 이슈요인 등과 상호 밀접한 연관 속에서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테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은 정당 요인 또는 이슈요인과 연관될 수 있고, 출신지역이나 거주지 등은 후보자 요인과 맞물려 후보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 요인을 독립적 투표결정요인 차원이 아니라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의 내부적 변수로 설정하여 투표행태 및 투표결정요인과의 연관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제주지역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

1. 역대선거의 흐름과 특징

역대 제주도에서 실시된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인물(후보자)을 중심으로 한 조직선거의 대결구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이 특징이다. 그 첫 시작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첫 민선시대의 막을 여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났다. 당시 민주자유당 우근민 후보와 무소속 신구범 후보가 출마해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는데, 이 선거는 제주사회에 큰 후유증을 남겼다. 정치적 라이벌이 된 두 후보간 갈등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도 각 후보진영의 주민들간 갈등이 크게 심화되었다.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공직내부에서는 매 선거 때마다 ‘출서기’ 내지 ‘편가르기’ 등의 폐해가 나타났다.

선거결과, 1995년 민선 1기 도지사 선거에서는 신구범 후보(무소속), 1998년 민선 2기 선거에서는 우근민 후보(새정치국민회의), 2002년 민선 3기 선거에서는 우근민 후보(새천년민주당)가 당선되었다. 3차례에 걸쳐 이뤄진 두 후보의 맞대결 선거전은 2004년 4월27일 우근민 지사가 직전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하면서(김성호, 2007), 대결구도는 변화하게 된다. 이에 따른 2004년 보궐선거와 2006년 민선 4기 선거에서는 김태환 후보(2004년 당시 한나라당, 2006년 무소속)가 당선되었다. 이어진 2010년 민선 5기 선거에서는 정계에 복귀한 우근민 후보(무소속)가 다시 당선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근민 지사는 관선지사를 포함해 총 5번에 걸쳐 12년간 지사직을 수행했고, 신구범 지사는 1993년 관선, 1995년 초대 민선지사 등 2번에 걸쳐 5년간 도지사에 재임했다. 김태환 지사는 2004년 보궐선거와 민선 4기 선거 등 6년간 도지사를 지냈다. 이를 두고 제주사회에서는 소위 ‘제주판 3김’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³⁸⁾. 지역내에서 ‘제주판 3김’은 ‘구태정치’라는 의미로 통하였

38) 오마이뉴스(2014, 2, 22). <‘제주판 3김 시대’ 이번엔 종식되나>. <http://www.ohmynews.com>

고, 이를 둘러싼 논란은 원희룡 후보(새누리당)가 당선된 2014년 민선 6기 선거까지 이어졌다³⁹⁾.

표 5.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 결과

단위 : %

선거연도	후보자별 득표율							
	정당	이름	정당	이름	정당	이름	정당	이름
민선1기 (1995)	민주자유당	우근민	민주당	강보성	무소속	신구범	무소속	신두완
	32.53		24.27		40.64		2.54	
민선2기 (1998)	한나라당	현임종	새정치국민회의	우근민	무소속	신구범		
	16.45		52.76		30.78			
민선3기 (2002)	한나라당	신구범	새천년민주당	우근민	민국당	신두완		
	45.41		51.40		3.18			
보궐선거 (2004)	한나라당	김태환	열린우리당	진철훈				
	55.1%		43.3%					
민선4기 (2006)	열린우리당	진철훈	한나라당	현명관	무소속	김태환		
	16.15		41.10		42.73			
민선5기 (2010)	민주당	고희범	무소속	현명관	무소속	우근민		
	18.03		40.55		41.40			
민선6기 (2014)	새누리당	원희룡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통합진보당	고승완	새정치당	주종근
	59.97		34.53		4.23		1.26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제주도 지방선거에서는 역대 민선 도지사를 위시한 ‘조직선거’라는 특수한 현상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이면에는 ‘퀵당문화’⁴⁰⁾를 중심으로 한 혈연·학연·지연 연고주의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는 민선 1기

제민일보(2013, 2, 2). <‘제주판 3김’ 종식 필요성 보여줬다>. <http://www.jemin.com>

39) 민선 6기 선거는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4번째 도전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의 양자대결로 펼쳐졌는데, 원 후보가 승리하였다.

40) 김희정·최낙진(2011)은 제주지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 연결망이라 할 수 있는 ‘퀵당’ 네트워크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퀵당’은 가족과 친족 중심(1차 연고주의)에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2차 중심의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제주에서 ‘퀵당’이란 용어가 단순한 친족개념이 아니라 지역 내 광범위한 연고주의 연결망의 의미로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5년)와 민선 2기(1998년), 민선 3기(2002년) 지방선거 3회 연속 ‘신구범 vs. 우근민’ 대결구도가 펼쳐지면서 소위 ‘신파’ ‘우파’라는 편가르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공직사회에서도 특정 후보에 ‘줄서기’ 등이 빚어졌던데 따른 것이다⁴¹⁾. 제주사회에 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한 도지사 선거의 이러한 양태는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다가,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조직동원 선거가 사라지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살펴볼 때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요인은 정당 요인이나 이슈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인물 중심)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반면, 지방의원 선거⁴²⁾에서는 도지사 선거와는 달리 ‘비판’과 ‘균형’ 투표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역대 도지사 선거에서 나타났던 양상과는 상당히 다른 투표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정당별 의석배분 현황

단위: 명

선거연도	의원정수	정당별 의석 배분(비례대표)					비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제8대 (2006)	41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교육의원
		22(3)	9(2)	1(1)	2(1)	2	5
제9대 (2010)	41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무소속	교육의원
		12(3)	18(2)	2(1)	1(1)	3	5
제10대 (2014)	41	한나라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교육의원
		17(4)	16(3)			3	5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3회에 걸쳐 실시된 도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특정 정당에 연속하여 의석배분을 쏠리게 함이 없이 교차적으로 다수당이 출현하는 현상을 보였다. 2006년 제8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22석, 열린우리당 9석으로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으나, 2010년 제9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

41) 2014년 민선 6기 도지사 선거를 전후해서는 제주지역에서 신구범-우근민-김태환 전 도지사를 일컬어 소위 ‘제주관 3김’으로 칭하며 ‘구태정치 청산’이 선거이슈로 등장하기도 했다.

42) 제주도의 지방선거는 1991년 광역의원과 시·군의원 선출로 이뤄지다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의회 제도는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였다.

당 12석, 민주당 18석으로 야당이 제1당이 되었다. 2014년 제10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17석, 새정치민주연합 16석, 무소속 3석으로 여야 의석이 균등하게 배분되는 결과가 나왔다. 각 선거마다 현역의원 교체비율이 높았는데, 제10대 도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교육의원을 포함하여 의원정수 41명 중 현역의원 교체율은 65%(27명)에 달하였다. 이는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의정활동 평가나, 후보자 자질과 능력, 의안처리 및 지역현안과 관련한 원내 정당활동 등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7. 역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득표 현황

단위: %, 괄호 안은 전국 득표율.

선거 연도	후보자별 득표율							
	정당	이름	정당	이름	정당	이름	정당	이름
제14대 (1992)	민주 자유당	김영삼	민주당	김대중	통일 국민당	정주영	신정당	박찬종
	39.97(41.96)		32.92(33.82)		16.14(16.31)		8.84(6.37)	
제15대 (1997)	한나라당	이회창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국민 의당	이인제	건설국민 승리21	권영길
	36.59(38.74)		40.57(40.27)		20.47(19.20)		1.40(1.19)	
제16대 (2002)	한나라당	이회창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 당	권영길		
	39.93(46.58)		56.05(48.91)		3.25(3.89)			
제17대 (2007)	대통합 민주신당	정동영	한나라당	이명박	민주 노동당	권영길	창조 한국당	문국현
	32.69(26.14)		38.67(48.67)		4.38(3.01)		7.78(5.82)	
제18대 (2012)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 통합당	문재인				
	50.46(51.55)		48.95(48.0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대선에서는 제주도의 선거결과가 전국선거 결과 비슷한 추이가 이어졌다. 제15대 선거에서부터 18대 선거까지 전국 1% 남짓한 제주도의 선택이 곧 당선으로 이어졌고 당선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국 득표율은 제주도에서 얻은 득표율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선에서 제주도가 전국선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⁴³⁾. 정치인

들이나 언론에서 제주도를 한국 선거에서 미국의 뉴햄프셔⁴⁴⁾와 같은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해 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⁴⁵⁾.

표 8. 역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후보자 득표 현황

단위: %

선거구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남제주군		
	성명	정당명	득표율	성명	정당명	득표율	성명	정당명	득표율
제14대 (1992)	현경대	무소속	39.60	양정규	무소속	54.60	변정일	무소속	46.20
제15대 (1996)	현경대	신한국당	42.40	양정규	신한국당	30.90	변정일	신한국당	34.10
제16대 (2000)	현경대	한나라당	46.70	장정언	새천년 민주당	55.20	고진부	새천년 민주당	54.00
선거구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성명	정당명	득표율	성명	정당명	득표율	성명	정당명	득표율
제17대 (2004)	강창일	열린 우리당	48.20	김우남	열린 우리당	38.00	김재윤	열린 우리당	59.60
제18대 (2008)	강창일	통합 민주당	39.29	김우남	통합 민주당	43.11	김재윤	통합 민주당	43.53
제19대 (2012)	강창일	민주 통합당	43.35	김우남	민주 통합당	69.89	김재윤	민주 통합당	37.10
제20대 (2016)	강창일	더불어 민주당	48.00	오영훈	더불어 민주당	45.20	위성곤	더불어 민주당	53.5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 선거정보를 토대로 재구성

제주도 총선에서는 <표 8>과 같이 2004년 제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 후 선거흐름이 다르게 나타난다. 1992년 14대 총선, 1996년 15대 총선, 2000년 16

43) 제주신보 (2012, 1, 16). <제주도를 위한 차기 대통령의 최소한의 조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730>

44) 미국 동북부의 뉴햄프셔는 인구 110만 명의 자그마한 주(州)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서 풍향계 역할을 한다. 전통적으로 이곳의 첫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뉴햄프셔가 미 대선의 바로미터가 된 것은 공화, 민주당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 분포가 고르고 무소속 후보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유권자가 인물과 정책, 이슈 중심의 투표를 할 만큼 정치의식과 민주의식이 높다(동아일보, 2007, 5, 21).

45) 그동안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권당을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 투표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동시에 합리적 투표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과거 제주도지사 선거(민선 1기~5기)에서는 제주도 특유의 혈연·학연·지연 등 소위 ‘권당문화’를 중심으로 한 연고주의와, 역대 민선 도지사를 위시한 ‘조직선거’ 등이 크게 나타나 병폐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선과 총선에서는 전국적 흐름과 일치하는 선거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제주도 유권자가 높은 정치의식 속에 합리적, 이성적 투표를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호·김성수(2006, 176쪽)는 제주도 선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며, “제주도는 한국의 뉴햄프셔처럼 정치1번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 총선까지는 집권여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14대 총선에서는 3개 선거구 모두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고, 15대 총선에서는 집권여당인 신한국당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다. 16대 총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후보 2명, 한나라당 후보 1명이 당선됐다⁴⁶⁾.

특이한 것은 이 시기까지 동일한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2회 이상 연속하여 당선되는 사례가 드물었다는 점이다. 이는 해당시기 정치적 쟁점이나 지역 이슈 현안과 연계한 현역의원 또는 정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해석된다. 총선에서는 제주도지사 선거 때와 같은 조직선거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선에서 제주도 유권자들이 합리적이고 균형적 투표를 한다는 평가가 많았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야권 강세’ 경향이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 17대부터 2016년 20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3개 선거구는 모두 야당이 석권하였다. 17대 총선에서는 이른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라는 중앙이슈가 작용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론’ 내지 ‘새누리당 공천파동’ 등 중앙단위 이슈와 ‘재산신고 누락’, ‘후보자 자질 시비’,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의 지역이슈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18대 총선과 19대 총선은 전국적 투표결과와 제주도 표심이 일치하지 않은 선거로 기록됐다. 전국적으로 여당이 완승한 선거였으나, 제주도 3개 선거구는 모두 야당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46) 2000년 16대 총선에서 북제주군선거구 당선자인 장정언 의원은 2002년 7월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었는데, 2002년 8월8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양정규 후보(한나라당)가 당선되었다.

2. 제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완승’, 새누리당의 ‘참패’, 국민의당 ‘약진’으로 막을 내린 제20대 총선의 결과는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2004년 제17대 총선부터 줄곧 3회 연속 3개 선거구 모두 야당에서 석권하였던 여파로 20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을 전후한 시점까지도 여당과 야당간 ‘균형의식’ 배분의 공감대는 크게 형성되는 분위기였다. 선거일 6일전까지 실시되었던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최소 1곳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곳에서는 초박빙 접전이란 결과가 제시되었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방송 3사의 선거종료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에서도 제주도에서는 2곳은 더불어민주당 우세, 1곳은 새누리당 우세로 예측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전 선거구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반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새누리당 34.97%(전국 33.50%), 더불어민주당 29.59%(전국 25.54%), 국민의당 22.41%(전국 26.74%)으로 새누리당이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당투표에서 1위를 하고도,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는 전패를 했다.

선거운동기간 공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의 흐름과는 상당부분 다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상당부분 표심이동이 있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단서라 할 수 있다. 실제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변경하거나 차선의 선택을 하는 ‘전략적 투표’로 전환하도록 하는 변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⁴⁷⁾. 전략적 투표는 유권자들의 선거관세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다. 관세가 확정세로 알려지게 되면, 다른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가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승자편승(bandwagon) 투표’, 또는 선두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거나, 당선가능성이 낮은 2위 후보를 동정해서 전략적으로 투표하게 되는 ‘견제 투표’ 혹은 ‘동정 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김용호, 2009, 250; 김용호·김경모, 2000)고 했다.

20대 총선에서 전략적 투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별도의 연구가

47) 헤드라인제주(2016, 4, 14). <더민주 ‘완승’, 새누리 ‘참패’...어떤 숨은 변수 있었나>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372>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의 요인으로는 중앙정치권을 시발로 하는 전국적 이슈와 지역단위의 이슈·쟁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20대 총선의 중앙이슈와 지역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주요한 이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앙언론(조선일보/한겨레)이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중앙언론의 제20대 총선 결과 분석기사 주요 내용⁴⁸⁾

조선일보	한겨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내전 ② 진박(眞朴)들의 과도한 마케팅 ③ 옥새파동 ④ 새누리당 심판 ⑤ 유승민 고사시키기 ⑥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거친 말 ⑦ 윤상현 막말 파문 ⑧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방식 ⑨ 대표 역할 못한 당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통령의 오만·불통, 전횡·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② 거대 양당 심판론(대안정당론) ③ 새누리당 공천갈등 ④ 더민주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⑤ 박대통령 광폭 ‘무리수’ 행보

‘새누리당 참패, 더불어민주당 완승, 국민의당 약진’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친박계와 비박계의 공천갈등, △진박(眞朴)들의 과도한 마케팅(진박 인증샷 역풍), △옥새파동, △새누리당 심판, △유승민 고사시키기, △이한구 공천위원장의 거친 말, △윤상현 막말 파문, △박대통령 광폭 ‘무리수’ 행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거대 양당 심판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내용 보다는 정치적 논란 이슈 사항들이 선거 판세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주도 일간신문(제민일보, 제주신보, 한라일보)의 20대 총선 결과 분석기사에

48) 이 표의 리스트는 20대 총선이 끝난 직후 선거결과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자체 분석 후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일보 4월14일자. <靑은 불통, 輿는 ‘이한구표 공천’ 내전…보수층마저 등돌렸다>, 조선일보 4월14일자. <‘성난 민심’ 원내 제1당도 갈아치워…‘여소야대 새누리당을 심판했다’>, 조선일보 4월15일자. <총선 참패 부른 새누리의 6가지 장면>, 한겨레 4월14일자. [사설] <반성하지 않으면 ‘레임덕 속도’만 빨라진다>, 한겨레 4월14일자. <야권 분열의 역설…여당에 어부지리 커녕 전략투표 흡수>, 한겨레 4월15일자. <맘 급했던 박 대통령 광폭 ‘무리수’ 행보>

서도 <표 10>과 같이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이의 내용을 보면, △정권 심판, △오만·분열 새누리당 심판, △부동산 투기의혹, △재산신고 누락, △선관위 고발, △전직 도지사 상왕노릇 구태, △공직자 공유지매입,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 △4·3위령제 대통령 불참, △후보자 자질부족 △국책사업 제주홀대, △원희룡 마케팅 역풍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 10. 제주도 언론의 제20대 총선 결과 분석기사 주요 내용⁴⁹⁾

제민일보	제주신보	한라일보
① 정권 심판 ② 오만·분열 새누리당 심판 ③ 재산신고 누락 ④ 후보자 자질부족 ⑤ 박 대통령 4·3위령제 불참 ⑥ 정부의 국책사업 제주홀대 ⑦ 효과 못한 '원희룡 마케팅'	① 정권심판 ② 정부의 제주홀대 ③ 새누리 후보 부동산 의혹 ④ 전직 도지사들의 선거개입과 구태정치 논란 ⑤ 현직 지사의 '원희룡 마 케 팅' 방치 ⑥ 감귤가격 폭락 ⑦ 4·3희생자 재심사 ⑧ 해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① 정권 심판 ② 부동산 투기의혹 ③ 재산신고 누락 ④ 선관위 고발 ⑤ 전직 도지사 상왕노릇 구태 ⑥ 여당후보 공유지매입 논란 ⑦ 공무원 선거중립 문제 ⑧ 4·3위령제 대통령 불참

이중 '정권심판' 및 '오만·분열 새누리당 심판' 등은 전국적으로 공히 나타난 중앙단위 이슈들이다⁵⁰⁾. 제주도 지역단위 이슈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전직 도지사 구태, △국책사업 제주홀대, △4·3위령제 대통령 불참 등과 함께, '재산신고 누락논란'이나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 '후보자 자질부족' 등 후보자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대거 포함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선거결과를 분석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지역현안 관련 정책적 쟁점 내용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즉, 공약이나 지역현안, 정책적 쟁점 등은 투표

49) 제민일보 2016년 4월14일자 사설 <원 지사도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야>.
 제민일보 2016년 4월14일자 <[20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정권 불신감 팽배 '견제와 감시' 선택>.
 제민일보 2016년 4월14일자 <민심 '오만·분열'의 집권여당 심판했다>.
 제주신보 2016년 4월15일자 <4·13 총선, 도내 정가에도 후폭풍 예고>.
 제주신보 2016년 4월15일자 <오만을 심판한 民心 >.
 한라일보 2016년 4월14일자 <[4·13 총선 의미와 과제] 인물론 도덕성 검증 여론 승부 갈라>.
 한라일보 2016년 4월15일자 사설 <제주발전 위한 큰 일꾼 다짐 행동으로 보여야>.
 50) 선거기간 중에 불거져 나온 사회적·정치적 주요 이슈에서는 총선과 관련한 직접적 논쟁 이슈는 아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입국' 보도 등이 크게 다뤄졌다.

결정에 미친 영향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거간 중 보도된 제주지역 방송사의 선거관련 뉴스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연히 나타났다.

표 11. 제20대 총선거간 KBS제주의 선거보도 주요 내용⁵¹⁾

△후보경선 컷오프, △공무원 선거개입, △후보경선 후유증, △후보경선 여론조사, △후보경선 현역의원 탈락, △후보경선 역선택 권유 논란, △후보자 이슈인식(제주발전,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예비후보자 구속, △경선 역선택 권유 수사의뢰, △4·3추념식 대통령 불참, △경선탈락 현역의원 재심청구 기각, △○○○후보 공무원 대량문자 발송 논란, △여론조사 박빙승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접전, △야당독식 논쟁 △낡은 정치 청산, △국민의당 제주도당 창당, △제2공항 건설 논란,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논란, △○○○후보 공동주택 인허가 무혐의 발표, △공식 선거운동 TV토론 시작, △○○○ 후보 재산신고 누락 의혹, △한국노총 더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 △서귀포시 TV토론 설전(일자리 정책, 감귤정책, 헬스케어타운 등 상대후보 공약 검증), △여야 후보 설전(야당국회의원 12년 종식 vs 공무원 이용 관련선거), △○○○ 후보 부동산 다운계약 의혹, △관련선거 논란(공무원 대량문자 발송 관련), △구태정치 청산(국민의당), △제주 을 TV토론 설전(제2공항, 시장 직선제, 1차산업 활성화), △4·3문제 해결(4·3추념식 전후 빈도 높음), △○○○ 후보 허위경력(총장 지냄) 유포 의혹, △김무성-김종인 4·3추념식 참석, △4·3희생자 재심사 논란, △○○○ 후보 부동산 의혹, △제주시 갑 TV토론 설전 △○○○ 재산신고 누락 공방 확산, △선관위 ○○○후보 재산신고 누락 허위공표 혐의 고발, △선관위 ○○○ 후보 허위 사실공표, △○○○ 후보 재산신고 누락 의혹, △선거구 판세 부동산 늘어(부동산누락 공방 변수), △제2공항반대위, 총선 일부후보 낙선운동 천명, △총선 여론조사 3곳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 △○○○ 후보 TV토론 불참, △3개 선거구 오차범위내 접전, △총선 사전투표율 10.7%,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후보 제외 모두 반대, △○○○ 후보 마지막 TV토론회 불참, △새누리당, ○○○ 선대위장 허위사실 공표 고발, △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 ○○○ 후보 검찰 고발, △제주시 갑 TV토론회, △새누리 후보 불참속 야권후보 공방, △민주노총, 영리병원 찬성 ○○○후보 규탄, △총선쟁점 마지막 정리, △○○○ 부동산 의혹·공유지 매입 논란, △○○○ 부동산 현물출자 논란, △제2공항, 행정시장 직선제, △더민주, 새누리 ○○○ 도의원 허위사실 유포 고발, △○○○ 후보 재산상황 공표 거짓.

위의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돌출적 이슈쟁점이 주류를 이루었고, 후보자의 공약·정책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뉴스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51) 이 내용은 KBS제주방송총국에서 20대 총선 관련 후보자 공천심사가 본격화되었던 2016년 3월 4일부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4월12일까지의 방송뉴스를 '다시보기'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 기간 보도되었던 총선 관련 뉴스 중 '정당요인' '이슈요인' '후보자요인' '미디어요인'의 성격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 내용의 뉴스들을 추려내어 정리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의 문구는 방송의 해당뉴스 메인타이틀 또는 뉴스보도 중 자막을 통해 송출된 제목, 또는 기사 본문에서 언급된 핵심적 내용을 압축 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 중 TV토론 등에서는 △제2공항 건설 관련, △부동산 폭등 및 주택안정대책, △4·3희생자 재심사, △해군 강정마을 주민 구상권 청구소송 논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주택안정대책, △감귤 등 1차산업 위기문제 등과 같은 지역적 현안이나 정책적 이슈가 분출되기는 했으나 여당과 야당 후보자 간 입장이 비슷하게 제시되면서 대립적 구도의 선거쟁점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⁵²⁾.

일부 선거구의 여당 후보자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청한 제주현안 정책질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TV토론 참석을 거부하면서 유권자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정책선거에 역행한다는 정당성명과 언론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⁵³⁾.

이러한 제주도 20대 총선의 흐름을 살펴볼 때, 선거에 임박하여 상당수 유권자들에게서 표심을 이동하게 하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유권자 표심 이동경로와 유추하여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52) 일례로 총선 당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와 4·3희생자 재심사에서는 제주지역 여야 후보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쟁점에 대한 대립적 구도가 형성되지 않았다.

53) 헤드라인제주(2016, 4, 11). <정책대결 '실종'...유권자는 뭘 갖고 판단하나>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no=272034>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측정 항목

앞서 살펴본 문헌검토와 선행연구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의 투표결정 요인 측정항목은 ① 후보자 요인, ② 정당 요인, ③ 이슈 요인, ④ 미디어 요인 4가지 유형으로 설정하였다⁵⁴⁾. 또한 각각의 요인별 속성항목은 김재전(2008), 서영남(2012), 이동규(2013), 이상목(2011)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유목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내고, 이론적 논의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해 제시되었던 항목들 중 20대 총선의 성격과 부합하는 내용들을 추가하였다.

요인별 속성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검토되었던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요인’에서는 ‘후보자요인’의 속성과 어떻게 배타적 구분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당요인의 주요변인을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고려 여부 등으로 재분류해 항목을 설정하였다. 둘째, ‘후보자요인’은 매우 다양한 차원의 속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던 항목들을 중심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셋째, 선행연구에서 ‘공약·정책’ 요인으로도 명명되고 있는 ‘이슈요인’은 선거기간 돌출됐던 사회·정치적 쟁점이슈의 변인과 혼동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통틀어 ‘이슈 요인’으로 명명하고, 그 내부 속성항목에서 ‘정책·공약’과 ‘사회·정치적 쟁점이슈’를 분리해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이슈요인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가져나가기 위해, ‘사회·정치적 쟁점이슈’ 변인에 대해서는 선거기간 중 분출되었던 전국단위 이슈와 지역단위 이슈 목록을 설정해 이의 변인들이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정도도 측정하도록 하겠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국내 연구에서 중앙단위 이슈와 지역단위 이슈의 투표결정 영향 지각 정도의 차

54) ‘유권자 요인’의 경우 <제2장 제2절 투표행태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립적 투표결정 요인 차원 보다는, 유권자 속성변인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주목해 살펴보기로 한다.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정치성향별 변인에 따른 투표행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규명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되면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미디어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되었던 TV토론회,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 언론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보도 등을 주요 속성변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의 논의를 확장하여, 선거정보를 입수했던 채널 유형이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기로 하겠다. 정보입수 채널의 유형은 기존 미디어 유형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친구·주변사람 등으로 확장하고, 텔레비전의 경우 지상파와 중편 방송 등으로 세분화시켜 살펴보겠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표 12>와 같이 총 17개의 측정항목을 설정하였다.

표 12. 투표결정 요인 측정항목

요인	측정항목
후보자요인(6개)	△후보자의 자질, 경력, 학력 등,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후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 △후보자의 출신지역, 혈연, 학연,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정당요인(4개)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당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
이슈요인(3개)	△선거 공약(공보물),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 내용, △사회·정치적 이슈나 쟁점
미디어요인(4개)	△TV토론 내용,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내용,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후보자 요인’ 측정항목은 △후보자의 자질, 경력, 학력 등,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후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 △후보자의 출신지역, 혈연, 학연,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등 6가지로 구성하였다. ‘정당요인’은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정당 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 4가지로 설정하였다. ‘이슈요인’은 △선거 공약(공보물),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 △사회·정치적 이슈나 쟁점 등 3가지 항목으로, ‘미디어 요인’은 △TV토론 내용,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내용,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내용 4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 4>의 투표결정 요인에 대한 전반적 검증을 하기로 한다. 또한 <연구문제 1>의 유권자 속성변인에 따라 투표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권자 속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등의 인구통계 사회적 속성항목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의 ‘미디어 이용정도’ 변인의 측정을 위해 △종이신문(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텔레비전, △인터넷, △휴대폰(스마트폰),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라디오 △기타(시사잡지) 등으로 항목을 설정하고 피조사자로 하여금 하루 평균 어느정도 이용하는지 이용시간을 직접 기술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연구문제 3>의 유권자의 선거정보 입수채널의 분석단위는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TV 방송뉴스 △중편 TV방송(조선, 매경, 동아, JTBC) 뉴스 등 △뉴스전문 방송채널(YTN, 연합TV), △인터넷신문, △포털(다음, 네이버, 구글 등) 뉴스, △종이신문 인터넷판 뉴스,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스, △라디오방송 뉴스,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 △후보자 TV토론,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 △후보자와 직접 접촉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 하였다.

<연구문제 5>의 중앙단위 쟁점이슈와 지역단위 쟁점이슈의 유권자 영향 인식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의 ‘이슈요인’의 속성으로 제시된 ‘사회·정치적 이슈 쟁점’ 항목에 대한 2차적 요인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하여 ‘사회·정치적 이슈쟁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앞의 제2장의 <제3절 제주지역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방송 뉴스보도 모니터링과, 총선 결과의 원인분석을 담은 중앙언론 및 지역언론의 뉴스보도 메시지의 핵심내용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여 <표 13>과 같이 사회·정치적 쟁점이슈 조사항목을 작성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총선 중앙단위 이슈로는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과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국민의당의 새누리·더민주당 심판론,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 △해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등 7개 측정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이 7

개 항목 중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항목은 사전조사에서 언론사의 선거결과를 분석한 보도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총선시기 크게 불거졌던 주요 언론의제이고, 선행연구 논의(김동석, 2012 등)에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변인 중 ‘북풍(北風)’이 주요하게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포함하였다.

표 13. 사회·정치적 쟁점이슈 측정항목

쟁점 이슈	측정항목
중앙단위 이슈(7개)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국민의당의 새누리·더민주당 심판론,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지역단위 이슈(10개)	△현역의원 교체론,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후보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제주4·3관련 논란(4·3위령제 대통령 불참, 4·3희생자 재심사 등),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 △감귤가격 폭락 등으로 민심 동요, △주택·토지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 과열

아울러 지역단위 이슈로는 △현역의원 교체론,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 △후보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제주4·3관련 논란(4·3위령제 대통령 불참, 4·3희생자 재심사 등),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 △감귤가격 폭락 등으로 민심 동요, △주택·토지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 과열 등 10개 항목이 선정되었다⁵⁵⁾.

55) 지역이슈는 1차적으로 10개 항목이 선정돼 조사가 이뤄졌으나, 분석과정에서는 빈도가 낮은 3개 항목(제주4·3관련, 감귤가격 폭락, 부동산시장 과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적으로 중앙이슈 7개, 지역이슈 7개를 선정해 분석이 진행되었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1. 연구 대상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제주도를 공간적 범주로 하여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는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등 3개 선거구로 편제돼 있다. 제2장의 <제3절 제주지역 선거에서 나타난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의 20대 총선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막바지 여론조사나 방송사 출구조사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야당의 완승으로 끝난 전국적 개표 결과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에서도 야당이 3개 선거구를 모두 석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주도 투표결정 요인 분석을 통하여서도 전국적 영향 요인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0대 총선의 제주도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결정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조사 대상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및 영향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위해 측정항목 및 유목을 이용하여 서베이(Survey) 방법의 실증조사를 실시했다. 본 연구의 표본은 제20대 총선 당시 제주도 3개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의 표본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위원회가 2016년 4월1일 확정, 발표한 선거구별(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 선거인명부를 참조해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으로 비례할당 추출했다. 본 연구에 적합한 표본은 최소 500명 이상이다. 3개 선거구별 인구비율을 우선 적용하였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성별·연령별 비율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연구자가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거나, 응답자로 하여금 조사 설문지에 직접 기재토록 하였다. 조사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표 14. 표본의 구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291	49.8
	여성	293	50.2
연령	20대 이하	125	21.4
	30대	100	17.1
	40대	181	31.0
	50대	119	20.4
	60대 이상	59	10.1
학력	고졸 이하	123	21.1
	대학 재학	73	12.5
	대졸	325	55.7
	대학원 이상	63	10.8
직업	농수축산업	24	4.1
	자영업	70	12.0
	서비스업	132	22.6
	공무원	91	15.6
	전문직 ⁵⁶⁾	90	15.4
	학생	61	10.4
	전업주부	34	5.8
	무직	18	3.1
	기타	64	11.0
소득	99만원 이하	113	19.3
	100~199만원	146	25.0
	200~299만원	167	28.6
	300~399만원	65	11.1
	400만원 이상	93	15.9
합 계		584	100

본 설문조사 기간은 2016년 8월 14일부터 31일까지로, 총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회수된 설문지 600부 중 응답을 부실하게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56) 전문직에는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다.

것과 불성실 응답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 제주도 갑 230부, 제주도 을 203부, 서귀포시 151부 등 총 584부를 유효설문지로 하여 연구분석에 사용되었다. 최종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류의 내용은 <표 14>와 같다.

전체 표본 중 성별로는 남성 291명(49.8%)과 여성 293명(50.2%)이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25명(21.4%), 30대 100명(17.1%), 40대 181명(31.0%), 50대 119명(20.4%) 그리고 60대 이상 59명(10.1%)이다. 학력별로는 대졸 325명(55.7%), 고졸 이하 123명(21.1%), 대학 재학 73명(12.5%) 그리고 대학원 이상 63명(10.8%) 순이었다. 직업은 서비스업 132명(22.6%), 공무원 91명(15.6%), 전문직 90명(15.4%), 자영업 70명(12.0%), 학생 61명(10.4%) 등이다. 소득의 경우 200-299만원 사이가 167명(28.6%)으로 가장 많았고, 100-199만원 사이 146명(25.0%), 99만원 이하 113명(19.3%), 400만원 이상 93명(15.9%), 300-399만원 사이 65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질문은 개방형질문과 폐쇄형질문을 혼합 사용하였다.

우선 투표후보 선택 및 지지후보 변경 등 투표행태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고, 미디어 이용량과 선거 정보를 입수하는 채널을 묻는 질문, 선거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표결정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 이슈요인의 속성항목 중 사회·정치적 이슈(중앙이슈/지역이슈)의 영향력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사회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을 제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분산분석(One way ANOVA) 등을 실시하였다. 통계검증의 유의수준은 95%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통해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유권자 특성에 따른 투표행태 차이의 검증은 교차분석을 하고 카이제곱검정(Chi-square Test)을 실시해 유의확률 p 값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또한 투표행태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의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고 F 값과 유의확률 p 값(통계적 유의수준 $p < 0.05$)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사후검정은 Waller-Duncan의 동일집단군 형태를 살폈다.

5.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측정에 사용된 조사자료의 질문 항목들이 조사도구로써 타당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타당성 검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차배근(1990, 182쪽)은 타당도란 올바른 측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측정하려는 바가 실제로 측정돼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측정 방법이 측정목적에 충실하도록 측정하는 정도”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특정 변수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수의 질문 항목들을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로 묶어 전체 변수를 요약하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요약된 변수가 연구목적에 맞게 측정해내는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회전방법은 베리맥스 직각회전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각 요인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했다. 신뢰도란 “믿을 수 있는 측정결과의 정도를 뜻하는 것”으로 비슷하거나 동일한 측정기구를 사용해 반복 측정했을 경우 결과가 똑 같거나 비슷하게 나오는 안정성과 예측성을 구비할 때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

다(차배근, 1990, 185쪽).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 간의 통일성과 내적일치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고,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들은 측정도구에서 제외시켜 전체 신뢰도를 높였다⁵⁷⁾. 이 결과 <표 15>와 <표 16>과 같이 주요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결과가 제시되었다.

표 15. 선거정보 입수채널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요인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신뢰도
선거정보 입수채널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861	2.461	17.577	.756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793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685	2.181	15.576	.735
	종합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835			
	뉴스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817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786	1.956	13.971	.752
	포털 뉴스를 통해서	.810			
	종이신문의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	.634			
	소셜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733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745	1.884	13.454	.746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552			
	후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480			

KMO=.755, Bartlett's의구형성검정($\chi^2=2293.904$, $df=91$, $p=.000$) 총분산(%)=60.578

본 연구의 주요변인들 중 ‘선거정보 입수채널’의 조사항목 12개를 요인분석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묶였다. 묶인 요인은 성격에 따라 ‘신문 요인’, ‘TV요인’, ‘인터넷 요인’, ‘대인접촉 요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⁵⁸⁾. ‘신문요인’은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TV요인’은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종합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뉴스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인터넷 요인’은 △인

57)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적일관성, 대안항목 신뢰성, 반복측정 신뢰성 3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적일관성을 채택했다. 내적일관성은 여러 가지 항목으로 측정했을 때 그 항목들이 일관성 혹은 동질성을 갖는가에 관한 것으로 통상 Cronbach's α 계수가 0.6이상이면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이학식·임지훈, 2012).

58) 당초 선거관련 정보입수 채널의 측정항목은 14개였으나 타당성 검증 결과 ‘라디오뉴스를 통해서’는 요인 적재값이 기준치(0.5)를 밑도는 0.4이하로 나타나 제거되었고, ‘TV토론을 통해서’는 적정한 요인으로 배치가 어려워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터넷신문을 통해서 △포털 뉴스를 통해서 △종이신문의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대인접촉 요인’은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후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 4개 요인 전체의 설명력 값은 기준값 50%를 넘는 60.578%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검증됐다.

표 16. 투표행태 주요변인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요인	측정문항	요인 적재량	고유치	분산 설명력(%)	신뢰도
후보자 요인	후보자의 자질, 경력, 학력 등	.648	2.187	54.687	.716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819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804			
	후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	.671			
KMO=.718, Bartlett's의 구형성검정($\chi^2=480.079$, $df=6$, $p=.000$)					
정당 요인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	.785	2.440	61.001	.786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	.766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844			
	정당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	.724			
KMO=.780, Bartlett's의 구형성검정($\chi^2=648.252$, $df=6$, $p=.000$)					
이슈 요인	선거 공약(공보물)	.699	1.897	63.221	.695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	.872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	.804			
KMO=.609, Bartlett's의 구형성검정($\chi^2=374.390$, $df=3$, $p=.000$)					
미디어 요인	TV토론 내용	.794	2.093	52.333	.685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 내용	.810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699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내용	.564			
KMO=.678, Bartlett's의 구형성검정($\chi^2=441.517$, $df=6$, $p=.000$)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 중 ‘후보자 요인’ 분석에서는 △후보자의 자질, 경력, 학력 등,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후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 4개 측정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다⁵⁹⁾

59) ‘후보자 요인’의 당초 조사항목은 6개였으나 ‘후보자의 출신지역, 혈연, 학연’, ‘후보자에 대한 주의의 평판’ 등 2개 항목의 경우 독립적 분석은 이뤄졌으나 요인 군락으로 묶기 어려운 점이 있어 투표행태와의 연관성 분석을 위한 요인에서는 제외되었다.

이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설명력 값은 54.687%를 보였다. ‘정당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4개 조사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하나로 묶인 요인의 전체 분산설명력 값은 61.001%였다. ‘이슈요인’ 또한 3개 문항은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하나로 묶인 요인은 전체 설명력 값은 63.221%로 나타났다. ‘미디어요인’의 4개 문항도 하나의 요인으로 묶였고, 이의 전체 설명력 값은 52.333%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 해당 요인들에 대한 하위 속성 요인들의 내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의 알파 계수 0.60이상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선거관련 뉴스 정보원의 ‘신문요인’은 0.756, ‘TV요인’ 0.735, ‘인터넷요인’ 0.752 그리고 ‘대인접촉요인’ 0.746, 다음으로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의 ‘후보자요인’ 0.716, ‘정당요인’ 0.786 ‘이슈요인’ 0.695 그리고 ‘미디어요인’ 0.685로,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에 대한 전체 모형의 유의성 확인 작업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선거정보 입수채널($p=.000<.001$, $KMO=0.755$), 유권자의 투표결정 요인 중 후보자요인($p=.000<.001$, $KMO=0.718$), 정당요인($p=.000<.001$, $KMO=0.780$), 이슈요인($p=.000<.001$, $KMO=0.609$), 미디어요인($p=.000<.001$, $KMO=0.678$) 각각의 Bartlett 구형성 검증결과 p 값이 모두 유의수준(<0.001) 범위에 있었고, 고유치는 기준값 1을 넘었으며, KMO^{60} 수치 역시 1에 비교적 근접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 모형의 유의성이 검증되어 통계분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0) 이학식·임지훈(2012, 328쪽)은 KMO는 전체 상관관계행렬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측정값이 0.50보다 크면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투표행태 및 투표결정 요인에 관한 일반적 조사

1. 표본의 특성과 투표행태 및 미디어 이용

1) 표본의 선거구 및 투표 유무

본 연구의 표본으로 선정된 유권자들(584명)을 20대 총선 당시 속해 있던 선거구별로 분류해 보면 <표 17>에서와 같이 제주시 갑 230명(39.4%), 제주시 을 203명(34.8%), 서귀포시 151명(25.9%)이다. 실제 선거구별 선거인수 분포비율⁶¹⁾과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표본의 구성요건은 갖췄다고 할 수 있다.

표 17. 표본의 선거구, 투표 유무, 투표 불참 이유

항 목		빈도(명)	퍼센트(%)
선거구 구분	제주시 갑	230	39.4
	제주시 을	203	34.8
	서귀포시	151	25.9
	합계	584	100.0
투표유무	투표 함	512	87.7
	투표 안함	72	12.3
	합계	584	100.0
투표하지 않은 이유 ⁶²⁾	시간적 여유 없음	17	25.0
	관심 없음	14	20.6
	적절한 후보 없음	13	19.1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22	32.4
	지지하는 후보 당선가능성 낮음	2	2.9
	합계	68	100.0

61)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 4월1일 확정, 발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총 497,555명이다. 선거구별로 보면 제주시 갑 190,415명(38.27%), 제주시 을 171,373명(34.44%), 서귀포시 135,767명(27.29%)이다.

표본인 대상자들 중 87.7%는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했다고 응답했고, 12.3%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들은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서’(32.4%), ‘투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25.0%),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어서’(20.6%), ‘찍을만한 후보가 없어서’(19.1%),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2.9%) 순으로 투표불참 사유를 제시했다.

2) 후보자 투표 및 정당 투표

연구문제 검증을 위하여 표본 응답자들이 20대 총선에서 실제 투표한 후보와 정당별로 분류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표본 응답자 중 지역구 후보 투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66.3%, 새누리당 후보 27.0%, 국민의당 후보 6.7%이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45.3%), 새누리당(25.8%), 국민의당(19.7%), 정의당(9.2%) 순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비율 분포는 실제 개표결과와 다소 상이한 점도 있지만, 표본 응답자들을 투표한 후보별로 집단화해 빈도와 비율을 갖고 교차분석을 하거나 평균치를 갖고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문제 검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8. 후보자 투표 및 정당 투표

투표한 후보 / 정당				
	후보자 투표 ⁶³⁾		정당 투표	
	빈도(명)	퍼센트(%)	빈도(명)	퍼센트(%)
새누리당	137	27.0	126	25.8
더불어민주당	337	66.3	221	45.3
국민의당	34	6.7	96	19.7
정의당	-	-	45	9.2
합계	508	100.0	488	100.0

62) ‘투표하지 않은 이유’ 문항 중 기타항목은 직접 기재방식이나, 응답내용이 없어 결측처리(4명) 하였다.

63) 투표한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정의당 응답자가 4명 있었으나 ‘기억 오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 결측 처리했다.

3) 투표결정 시기, 후보 변경, 정치성향

표본 응답자들의 투표할 후보 결정 시기와 투표할 후보의 변경 여부, 응답자의 정치성향을 조사한 결과 <표 19>와 같다. 먼저, 20대 총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선거 1주일 전(3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선거일 보름 전후(22.7%)와 선거일 한 달 전후(22.4%), 선거일 두 달 전후(15.2%) 순으로 답했다. 선거 1주일 전이나 보름 전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 층(54.1%)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정요인에 의한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선거일 한 달 또는 두 달 전후한 시점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 층(37.6%)의 경우는 선거쟁점이나 돌출적 이슈 등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층으로 추정된다.

표 19. 투표후보 결정시기, 투표후보 변경, 정치적 성향

항 목		빈도(명)	퍼센트(%)
투표후보 결정시기	당일	43	8.3
	1주일 전	163	31.4
	보름 전후	118	22.7
	한 달 전후	116	22.4
	두 달 전후	79	15.2
	합계	519	100.0
후보변경 여부	있다	177	30.3
	없다	407	69.7
	합계	584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44	7.5
	보수에 가까움	91	15.6
	중도	216	37.0
	진보에 가까움	200	34.2
	진보적	33	5.7
	합계	584	100.0

다음으로 선거 기간 중 후보자를 바꾼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9.7%가 ‘바꾼 적 없다’고 했고, 30.3%는 찍고자 하는 후보를 바꿔 투표했다고 답했다. 표본 응답자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중도(37.0%)가 가장 많았으

며, 이어 진보에 가깝다(34.2%), 보수에 가깝다(15.6%), 보수적이다(7.5%), 진보적이다(5.7%) 순으로 답했다.

4) 유권자의 후보 결정시 고려사항

투표할 후보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예시항목 6개를 제시한 후 가장 중요시한 항목을 ‘1순위’, 그다음 순위를 ‘2순위’식으로 순위를 매기도록 한 다중응답형식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 20>과 같은 내용이 제시되었다. 후보자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한 고려사항으로는 지지후보의 자질(도덕성)/능력/경력(5.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정당(4.24)과 공약사항(3.92), 주위의 평판/이웃의 조언(3.22), 당선가능성(2.81), 학연/지연/혈연(1.76) 순으로 답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후보자의 자질/능력/경력 등 인물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소속정당, 공약사항, 주위의 평판이나 이웃의 조언을 두루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후보 결정시 고려사항⁶⁴⁾

항 목	빈도(명)	평균
소속정당	584	4.24
공약사항	583	3.92
자질(도덕성)/능력/경력	582	5.08
당선 가능성	582	2.81
학연/지연/혈연	581	1.76
주위의 평판/이웃의 조언	582	3.22

5) 매체별 뉴스 이용시간 및 선거정보 입수채널

표본 응답자들의 선거기간 중 언론매체별 뉴스 이용시간은 <표 21>과 같다. 조사에 사용된 뉴스 미디어 유형은 정용복(2014)의 연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64) 순위 다중응답형식으로 이뤄진 이 조사의 평균값은 6개 항목 중 가장 우선시한 순위를 역순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최고치 6에 가까울수록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의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논의하고 있는 매체구분 유형을 참고해 지역일간지, 중앙일간지, TV방송, 인터넷, 휴대폰, 소셜미디어 등을 제시하였고, 응답자로 하여금 뉴스 이용시간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 결과 1주일간 하루 평균 뉴스이용 시간은 텔레비전 방송이 51.61분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대폰 47.54분, 인터넷 47.13분, 그리고 소셜미디어 46.00분, 중앙일간지(종이신문)는 28.08분, 지역일간지(종이신문) 27.50분으로 나타났다.

표 21. 매체별 평균 뉴스 이용시간⁶⁵⁾

항목	빈도(명)	평균(분)
종이신문(지역일간지)	242	27.50
종이신문(중앙일간지)	193	28.08
텔레비전 방송	509	51.61
인터넷(PC, 노트북)	421	47.13
휴대폰(스마트폰)	473	47.54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등)	241	46.00

표 22. 유권자의 선거 정보 입수채널

선거 정보 입수채널		빈도(명)	평균
신문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584	2.58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584	2.30
TV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584	3.67
	종편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584	2.69
	뉴스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584	2.84
인터넷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584	3.28
	포털 뉴스를 통해서	584	3.21
	종이신문의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	584	2.31
	소셜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584	2.41
대인 접촉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584	3.33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584	2.57
	후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584	1.73

65) <표 21>의 미디어 이용시간 조사분석에서 '라디오 시간' 및 '기타(시사잡지 등)' 항목은 응답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서 결측처리 했다.

이어 20대 총선 기간 중 선거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해 5점척도의 조사를 한 결과, 선거정보 입수채널의 빈도는 <표 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TV방송 뉴스,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관성 있는 항목별로 묶은 요인별로는 신문요인에서는 지역일간지(2.58)가 중앙일간지(2.30)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TV요인에서는 TV방송 뉴스를 통해서(3.67), 뉴스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2.84), 종편 TV방송 뉴스를 통해서(2.69)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요인은 인터넷신문을 통해서(3.28)가 가장 높았고, 포털 뉴스를 통해서(3.21), 소셜 미디어 뉴스를 통해서(2.41), 종이신문의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2.31) 순이었다. 대인접촉 요인에서는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3.33)가 가장 높았고,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2.57), 후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1.73) 순으로 나타났다.

2. 투표결정 요인 및 이슈 영향 인식

1) 투표결정요인 평균분석

20대 총선에서 투표를 할 후보들을 결정할 때 고려했던 4가지 차원의 요인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는 <표 23>과 같다. 투표결정 요인 중 <후보자 요인>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경력·학력 등’(3.99),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3.84),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3.79),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3.48)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후보자의 외모·말투·태도 등’(2.99),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2.4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후보자 요인에서는 자질이나 지역발전 기여도, 참신성 등이 투표결정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정당 요인>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3.51)와 ‘정당 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3.07)이 다른 항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2.94),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

보'(2.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슈 요인>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3.53)과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3.44)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선거공약(공보물)'(2.77)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디어 요인>에서는 'TV토론 내용'(3.27), '언론의 논평, 사실이나 뉴스 내용'(3.19),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3.01),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내용'(2.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 평균분석

	투표결정 요인	빈도(명)	평균
후보자 요인	후보자의 자질·경력·학력 등	584	3.99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584	3.79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584	3.84
	후보자의 외모·말투·태도 등	584	2.99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	584	2.42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584	3.48
정당 요인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	584	3.51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	584	2.77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584	2.94
	정당 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	584	3.07
이슈 요인	선거 공약(공보물)	584	2.77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	584	3.44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	584	3.53
미디어 요인	TV토론 내용	584	3.27
	언론의 논평, 사실이나 뉴스 내용	584	3.19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584	3.01
	정당, 후보자 정치광고 내용	584	2.07

2) 중앙이슈와 지역이슈 영향 인식 정도

위의 투표결정 요인 4가지 중 <이슈 요인>에 있어 사회적·정치적 쟁점 요소의 경우 추가적으로 중앙단위 이슈와 지역단위 이슈로 구분해 후보자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조사가 진행되었다.

주요 이슈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는 <표 24>와 같이, 중앙이슈에서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3.54), ‘현 정부 심판론’(3.50), ‘새누리당 공천 갈등’(3.49),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3.24), ‘국민의당의 거대양당 심판론’(3.11) 순으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 미사일 발사 뉴스’(2.34),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2.17)은 상대적으로 영향력 인식정도가 낮았다.

표 24. 사회적·정치적 주요이슈 영향 인식정도

사회적·정치적 주요이슈		빈도(명)	평균
중앙 이슈	현 정부 심판론	584	3.50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584	3.49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584	3.54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584	3.24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민주당 심판론	584	3.11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	584	2.34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584	2.17
지역 이슈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	584	3.26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584	3.47
	제주도 후보 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584	3.35
	제주도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584	3.63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584	3.09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584	3.14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	584	3.25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3.63),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3.47), ‘제주도 후보 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3.35) 등에서 영향력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3.26),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논란’(3.25),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3.14), ‘원희룡 마케팅 논란’(3.09) 등의 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슈 요인의 영향력 인식정도에서 주목할 점은 장기적 현안이나 정책쟁점 보다는 선거기간 중 돌출됐던 갈등·논란 이슈들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투표결정에 있어 이슈요인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자, 의외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문제 검증 결과

1. <연구문제 1>의 검증 : 투표행태와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은 유권자의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가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설정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독립변인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과 종속변인 유권자 투표행태 상호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5> 및 <표 26>과 같다.

표 25. 인구통계적 변인과 유권자 투표행태 교차분석

			투표한 후보				지지후보 변경		
			새누리당 후보	더불어 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성별	남성	빈도 (%)	77 (56.2)	163 (48.4)	20 (58.8)	260 (51.2)	79 (44.6)	212 (52.1)	291 (49.8)
	여성	빈도 (%)	60 (43.8)	174 (51.6)	14 (41.2)	248 (48.8)	98 (55.4)	195 (47.9)	293 (50.2)
	전체		137 (27.0)	337 (66.3)	34 (6.7)	508 (100.0)	177 (30.3)	407 (69.7)	584 (100.0)
$\chi^2(p)$			3.246(.197)				2.743(.098)		
df			2				1		
연령	20대 이하	빈도 (%)	22 (16.1)	71 (21.1)	9 (26.5)	102 (20.1)	40 (22.6)	85 (20.9)	125 (21.4)
	30대	빈도 (%)	10 (7.3)	66 (19.6)	6 (17.6)	82 (16.1)	32 (18.1)	68 (16.7)	100 (17.1)
	40대	빈도 (%)	30 (21.9)	122 (36.2)	10 (29.4)	162 (31.9)	53 (29.9)	128 (31.4)	181 (31.0)
	50대	빈도 (%)	41 (29.9)	61 (18.1)	7 (20.6)	109 (21.5)	38 (21.5)	81 (19.9)	119 (20.4)
	60대 이상	빈도 (%)	34 (24.8)	17 (5.0)	2 (5.9)	53 (10.4)	14 (7.9)	45 (11.1)	59 (10.1)
$\chi^2(p)$			61.023(.000***)				1.753(.781)		
df			8				4		
학력	고졸이하	빈도 (%)	48 (35.0)	53 (15.7)	5 (14.7)	106 (20.9)	30 (16.9)	93 (22.9)	123 (21.1)
	대학재학	빈도 (%)	15 (10.9)	39 (11.6)	4 (11.8)	58 (11.4)	24 (13.6)	49 (12.0)	73 (12.5)
	대졸	빈도 (%)	59 (43.1)	205 (60.8)	21 (61.8)	285 (56.1)	104 (58.8)	221 (54.3)	325 (55.7)
	대학원 이상	빈도 (%)	15 (10.9)	40 (11.9)	4 (11.8)	59 (11.6)	19 (10.7)	44 (10.8)	63 (10.8)
$\chi^2(p)$			23.864(.001**)				2.708(.439)		
df			6				3		

소득	99만원 이하	빈도 (%)	40 (29.2)	47 (13.9)	6 (17.6)	93 (18.3)	32 (18.1)	81 (19.9)	113 (19.3)
	~199만원	빈도 (%)	30 (21.9)	91 (27.0)	9 (26.5)	130 (25.6)	45 (25.4)	101 (24.8)	146 (25.0)
	~299만원	빈도 (%)	25 (18.2)	103 (30.6)	13 (38.2)	141 (27.8)	51 (28.8)	116 (28.5)	167 (28.6)
	~399만원	빈도 (%)	16 (11.7)	39 (11.6)	3 (8.8)	58 (11.4)	25 (14.1)	40 (9.8)	65 (11.1)
	400만원 이상	빈도 (%)	26 (19.0)	57 (16.9)	3 (8.8)	86 (16.9)	24 (13.6)	69 (17.0)	93 (15.9)
$\chi^2(p)$			22.025(.005**)				3.172(.529)		
df			8				4		

(***p<.001, **p<.01, *p<.05)

표 26. 유권자의 정치성향과 투표행태 교차분석

			투표한 후보				지지후보 변경		
			새누리당 후보	더불어 민주당 후보	국민의당 후보	전체	있다	없다	전체
정치 ⁶⁶⁾ 성향	보수적	빈도 (%)	84 (61.3)	36 (10.7)	5 (14.7)	125 (24.6)	43 (24.3)	92 (22.6)	135 (23.1)
	중도	빈도 (%)	31 (22.6)	130 (38.6)	15 (44.1)	176 (34.6)	71 (40.1)	145 (35.6)	216 (37.0)
	진보적	빈도 (%)	22 (16.1)	171 (50.7)	14 (41.2)	207 (40.7)	63 (35.6)	170 (41.8)	233 (39.9)
	전체		137 (27.0)	337 (66.3)	34 (6.7)	508 (100)	177 (30.3)	407 (69.7)	584 (100)
$\chi^2(p)$			139.778(.000***)				2.003(.367)		
df			4				2		

(***p<.001, **p<.01, *p<.05)

첫째, 투표를 할 후보 선택과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 성별을 제외한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서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변인별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성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남성 유권자에서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는 여성 유권자에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chi^2=3.246, p=.197>.05$). 연령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는 40대와 30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chi^2=61.023, p=.000<.001$).

66) 정치성향은 기존 5점 척도를 3점 척도로 축소한 후 해당 종속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학력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고졸 이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대학 재학생과 대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 저소득자와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월 299만원 이하에서 많았다. 학력에 따른 차이($\chi^2=23.8647$, $p=.001<.01$)와 소득에 따른 차이($\chi^2=22.025$, $p=.005<.01$)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치성향 변인 검증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집중된 쏠림 현상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중도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chi^2=139.778$, $p=.000<.001$).

둘째, 지지후보 변경과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지후보를 변경한 경험은 여성 유권자에서, 20대 이하와 30대, 50대에서, 대학 재학 또는 대졸에서, 월 199만원 이하와 299만원 이하에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보수적 또는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서 지지후보 변경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후보 변경과 성별($\chi^2=2.743$, $p=.098>.05$), 연령($\chi^2=1.753$, $p=.781>.05$), 학력($\chi^2=2.708$, $p=.439>.05$), 소득($\chi^2=3.172$, $p=.529>.05$), 정치성향($\chi^2=2.003$, $p=.367>.05$) 등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연구문제 2>의 검증 : 투표행태와 미디어 이용량

본 연구의 <연구문제 2>는 유권자의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가 미디어(지역/중앙 일간지, TV,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용량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투표할 후보 선택 또는 지지후보 변경이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시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를 정리하면 <표 27> 및 <표 28>과 같다.

표 27. 투표후보 선택과 미디어 이용시간 분산분석

	투표한 후보	빈도(명)	평균(분)	SD	F	P
지역일간지	새누리당 후보	73	30.62	26.26	0.871	.420
	더불어민주당 후보	135	26.48	18.80		
	국민의당 후보	14	26.07	28.57		
중앙일간지	새누리당 후보	53	25.47	20.95	0.397	.673
	더불어민주당 후보	106	27.97	23.12		
	국민의당 후보	14	31.43	38.35		
TV 뉴스	새누리당 후보	122	56.52	34.63	1.809	.165
	더불어민주당 후보	289	49.46	35.00		
	국민의당 후보	31	49.35	35.02		
인터넷 ⁶⁷⁾	새누리당 후보	104	34.72	26.39	2.843	.059
	더불어민주당 후보	317	42.31	30.17		
	국민의당 후보	32	44.22	32.06		
소셜미디어	새누리당 후보	38	41.58	40.99	0.437	.647
	더불어민주당 후보	157	45.29	45.80		
	국민의당 후보	16	54.38	57.62		

(***p<.001, **p<.01, *p<.05)

표 28.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미디어 이용시간 분산분석

	지지후보 변경	빈도(명)	평균(분)	SD	F	P
지역일간지	있다	68	26.54	19.15	.181	.670
	없다	174	27.87	22.77		
중앙일간지	있다	59	27.80	20.64	.012	.914
	없다	134	28.21	25.81		
TV 뉴스	있다	153	51.31	36.34	.016	.898
	없다	356	51.74	34.48		
인터넷	있다	164	40.26	26.26	.021	.885
	없다	358	40.67	31.46		
소셜미디어	있다	73	46.71	42.47	.000	.998
	없다	168	46.70	47.41		

(***p<.001, **p<.01, *p<.05)

67) 정용복(2014)과 한국언론재단(2016)의 뉴스 매체별 구분에 따르면 인터넷의 하위 개념으로 고정형인터넷(PC, 노트북)과 이동형인터넷(휴대폰)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투표행태에 따른 ‘인터넷 이용시간’의 분산분석에서는 <표 21>의 도표에 있는 ‘인터넷(PC, 노트북) 이용시간’과 ‘휴대폰(스마트폰) 이용시간’의 평균값을 구해 ‘인터넷 이용시간(통합)’ 값으로 사용했다.

검증 결과, 유권자의 투표후보 선택과 미디어 이용시간 간에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지역일간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 30.62분($SD=26.26$)으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 26.48분($SD=18.80$),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 26.07분($SD=28.5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871, p=.420>.05$). 중앙일간지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투표자가 31.43분($SD=38.35$)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 27.97분($SD=23.12$),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25.47분($SD=20.9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변량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F=.397, p=.673>.05$).

TV 뉴스 하루 평균 이용량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56.52분($SD=34.63$)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 49.46분($SD=35.00$),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 49.35분($SD=35.02$) 순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F=1.809, p=.165>.05$). 인터넷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가 44.22분($SD=32.06$)으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 42.31분($SD=30.17$),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34.72분($SD=26.39$) 순이었다.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해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국민의당 후보 선택군에서 현저하게 높았으나, 유의미한 통계범위를 벗어나 있었다($F=2.843, p=.059>.05$).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 54.38분($SD=57.62$)으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 45.29분($SD=45.80$),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41.58분($SD=40.99$)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F=.437, p=.647$).

두 번째로, 지지후보 변경여부와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지역일간지($F=.181, p=.670>.05$), 중앙일간지($F=.012, p=.914>.05$), TV뉴스($F=.016, p=.898>.05$), 인터넷($F=.021, p=.885>.05$), 소셜미디어($F=.000, p=.998>.05$)의 이용시간과 지지후보 변경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역일간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후보를 변경한 적이 있는 유권자 26.54분($SD=19.15$), 변경한 적이 없는 유권자의 평균은 27.87분($SD=22.77$)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의 경우 후보를 변경한 적이 있는 유권자 27.80분($SD=20.64$), 후보를 변경

한 적이 없는 유권자 28.21분($SD=25.81$)으로 분석됐고, TV뉴스의 경우 변경한 적이 있는 유권자 51.31분(36.34), 변경한 적이 없는 유권자 51.74분($SD=34.48$)이었다. 두 집단간 평균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에 있어서도 후보를 변경한 적이 있는 유권자 40.26분($SD=26.26$), 변경한 적이 없는 유권자 40.67분($SD=31.46$)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소셜미디어의 경우 후보를 변경한 적이 있는 유권자 46.71분($SD=42.47$), 변경한 적이 없는 유권자 46.70분($SD=47.41$)로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미디어 유형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은 지역일간지와 TV뉴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중앙일간지 이용시간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특정 매체유형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나 종이신문 보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TV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구문제 3>의 검증 : 투표행태와 선거정보 입수채널

본 연구의 <연구문제 3>은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선거정보 입수채널(신문, TV, 인터넷, 대인접촉)⁶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선거 이슈 및 쟁점, 여론조사 결과 및 판세분석 등의 선거관련 뉴스는 매체별로 보도 방식이나 구성,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유권자가 어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었느냐에 따라 의제인식과 태도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을 통해 정보입수 채널은 투표 후보별 유권자 집단⁶⁹⁾ 간에 어떤

68)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의 분석을 위하여 12개 유형으로 분류돼 측정됐던 조사항목의 입수채널 유형을 ‘신문 요인’과 ‘TV 요인’, ‘인터넷 요인’, ‘대인접촉 요인’ 등 4가지 차원의 그룹으로 분류했다. ‘신문 요인’은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2개 항목을 아우르며, ‘TV요인’은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종편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뉴스전문 방송 채널을 통해서 3개 항목을 묶어 설정됐다. ‘인터넷요인’은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포털 뉴스를 통해서 △종이신문의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뉴스를 통해서 4개 항목이 묶여졌고, ‘대인접촉 요인’은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후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69) 여기서 ‘집단’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면대면(面對面의) 커뮤니케이션을 갖는 가족, 직장, 팀 등의 ‘일차집단’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나와 동일시하며, 가치나 행동 등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통해 정보입수채널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29> 및 <표 30>과 같다.

먼저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선거정보 입수채널 유형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문 요인’, ‘TV 요인’, ‘인터넷 요인’, ‘대인접촉 요인’ 등 4가지 차원의 요인 중 ‘인터넷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F=18.006, p=.000<.001$). 신문요인($F=.707, p=.493>.05$)이나 TV요인($F=.046, p=.955>.05$), 대인접촉 요인($F=1.820, p=.163>.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29. 투표후보 선택과 선거정보 입수채널 분산분석

선거정보 입수채널	투표한 후보	빈도(명)	평균	SD	F	P
신문	새누리당 후보	137	2.54	1.13	0.707	.493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2.45	1.12		
	국민의당 후보	34	2.31	1.04		
TV	새누리당 후보	137	3.02	0.94	0.046	.955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04	0.94		
	국민의당 후보	34	3.08	0.92		
인터넷	새누리당 후보	137	2.41	0.97	18.006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2.95	0.89		
	국민의당 후보	34	2.96	0.85		
대인접촉	새누리당 후보	137	2.59	0.78	1.820	.163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2.58	0.68		
	국민의당 후보	34	2.34	0.74		

(***p<.001, **p<.01, *p<.05)

신문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의 평균값이 2.54($SD=1.13$)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45, SD=1.12$)나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31, SD=1.04$)에 비해 정보 입수채널로서 신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TV뉴스의 정보입수 채널의 비중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그 의존 정도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08$,

의 준거기준이 되는 집단, 즉 ‘준거집단’을 말한다(Severin, Werner J., Tankard, James W, 2001/2004)

SD=0.92)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04$, $SD=0.94$),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02$, $SD=0.94$)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고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터넷 요인에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96$, $SD=0.85$)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95$, $SD=0.89$)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41$, $SD=0.9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즉 이 두 정당의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보다 자신의 지지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더 많이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대인접촉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59$, $SD=0.78$)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58$, $SD=0.68$)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34$, $SD=0.74$)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앞에서 살펴본 뉴스나 정보 입수채널의 측정항목별 5점 척도의 평균값에서는 TV 뉴스(3.67),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3.33), 인터넷신문(3.28), 포털뉴스(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일간지(2.58), 중앙일간지(2.30) 등 종이신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요인이 ‘인터넷’에 국한돼 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입수 통로로서 TV와 인터넷 매체 뉴스와 정보, 주변의 의견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 간에 선거정보 입수채널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미디어요인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V요인에 있어서는 지지후보를 변경한 경험이 있는 유권자의 TV뉴스를 통한 선거정보 입수 평균값이 3.18($SD=0.96$)로, 그렇지 않은 유권자($M=3.02$, $SD=0.94$)보다 높게 나왔으나 유의미한 통계범위에서 벗어났다($F=3.459$, $p=.063>.001$). 인터넷 요인에 있어서는 변경 경험이 있는 유권자의 인터넷 정보 활용 정도가 평균 2.89($SD=0.88$)로 그렇지 않은 유권자($M=2.77$, $SD=0.94$)보다 높았으나, 이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18.006$, $p=.162>.001$).

표 30.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선거정보 입수채널 분산분석

선거정보 입수채널	지지후보 변경	빈도(명)	평균	SD	F	P
신문	있다	177	2.34	1.10	2.042	.154
	없다	407	2.49	1.12		
TV	있다	177	3.18	0.96	3.459	.063
	없다	407	3.02	0.94		
인터넷	있다	177	2.89	0.88	1.958	.162
	없다	407	2.77	0.94		
대면접촉	있다	177	2.53	0.68	0.076	.784
	없다	407	2.55	0.74		

(***p<.001, **p<.01, *p<.05)

신문요인에서는 변경 경험이 있는 유권자($M=2.34$, $SD=1.10$) 보다 그렇지 않은 유권자($M=2.49$, $SD=1.12$)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2.042$, $p=.154>.001$). 대면접촉 요인에서는 변경 경험이 있는 유권자($M=2.53$, $SD=0.68$)와 경험이 없는 유권자($M=2.55$, $SD=0.74$)의 평균치가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076$, $p=.784>.001$).

4. <연구문제 4>의 검증 : 투표행태와 투표결정 요인

본 연구의 <연구문제 4>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투표결정요인을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의 요인들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는데, 이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표 31> 및 <표 32>와 같다.

먼저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후보자 요인($F=3.259$, $p=.039<.05$), 미디어 요인($F=3.204$, $p=.041<.05$)에서는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정당요인과 이슈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31. 투표후보 선택과 투표결정 요인 분산분석

투표결정 요인	투표한 후보	빈도(명)	평균	SD	F	P
후보자 요인	새누리당 후보	137	3.53	0.58	3.259	.039*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41	0.55		
	국민의당 후보	34	3.32	0.58		
정당 요인	새누리당 후보	137	3.10	0.84	1.168	.312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13	0.78		
	국민의당 후보	34	2.91	0.98		
이슈 요인	새누리당 후보	137	3.23	0.81	0.328	.721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25	0.74		
	국민의당 후보	34	3.34	0.72		
미디어 요인	새누리당 후보	137	2.99	0.76	3.204	.041*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2.87	0.69		
	국민의당 후보	34	2.65	0.90		

(***p<.001, **p<.01, *p<.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의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해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 보았다. 이 결과 ‘후보자 요인’에서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 간 격차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의 평균은 3.53($SD=0.58$)으로, 다른 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평균값은 3.32($SD=0.5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평균값은 3.41($SD=0.55$)이다.

TV토론, 언론의 논평·사설, 여론조사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평균값 2.99($SD=0.76$)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87$, $SD=0.69$)나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65$, $SD=0.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당 요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13$, $SD=0.78$)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10$, $SD=0.84$)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91$, $SD=0.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1.168$, $p=.312>.05$).

‘이슈 요인’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34$, $SD=0.72$)가 새누리당후

보 투표자($M=3.23$, $SD=0.81$)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25$, $SD=0.74$)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328$, $p=.721>.05$).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투표결정요인에 있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은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정당요인을,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은 이슈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해 투표를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투표결정 요인 분산분석

투표결정 요인	지지후보 변경	빈도(명)	평균	SD	F	P
후보자 요인	있다	177	3.50	0.55	4.707	.030*
	없다	407	3.38	0.58		
정당 요인	있다	177	3.00	0.82	2.071	.151
	없다	407	3.11	0.84		
이슈 요인	있다	177	3.25	0.77	0.002	.965
	없다	407	3.25	0.81		
미디어 요인	있다	177	2.94	0.75	1.483	.224
	없다	407	2.86	0.72		

(*** $p<.001$, ** $p<.01$, * $p<.05$)

다음으로, 투표결정 요인에 있어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 요인’($F=4.707$, $p=.030<.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지후보 변경을 경험한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후보자의 자질, 지역발전 기여도, 이미지, 외모, 말투 등 후보자 요인 요소를 더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정당 요인($F=2.071$, $p=.151>.05$)이나 이슈 요인($F=.002$, $p=.965>.05$), 미디어 요인($F=1.483$, $p=.224>.05$)에 있어서는 지지후보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연구문제 5>의 검증 : 중앙/지역 이슈 영향인식과 투표행태

본 연구의 <연구문제 5>는 투표결정 요인 중 ‘이슈 요인’의 속성에 포함되었던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의 내용이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정치적 이슈·쟁점을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로 구분하여 이의 세부 유목 요인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를 정리하면 <표 33>, <표 34>, <표 35>, <표 36>과 같다

표 33. 투표후보 선택과 중앙이슈 분산분석

중앙이슈	투표한 후보	빈도(명)	평균	SD	F	P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후보	137	3.03	1.05	30.883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77	0.89		
	국민의당 후보	34	3.50	0.93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후보	137	3.34	1.02	3.989	.019*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59	0.90		
	국민의당 후보	34	3.68	1.20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새누리당 후보	137	3.26	1.09	11.570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69	0.91		
	국민의당 후보	34	3.85	0.96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후보	137	3.35	0.92	2.941	.054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18	0.85		
	국민의당 후보	34	3.47	1.08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민주당 심판론	새누리당 후보	137	3.06	1.00	2.552	.079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09	0.96		
	국민의당 후보	34	3.47	1.05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	새누리당 후보	137	2.75	1.19	18.786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2.10	1.01		
	국민의당 후보	34	2.47	0.90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새누리당 후보	137	2.52	1.15	13.211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1.99	0.98		
	국민의당 후보	34	2.09	0.79		

(***p<.001, **p<.01, *p<.05)

1) 투표후보와 중앙이슈 영향인식

먼저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중앙/지역 이슈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F=30.883, p=.000<.001$),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F=3.989, p=.019<.05$),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F=11.570, p=.000<.001$),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F=18.786, p=.000<.001$),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F=13.211, p=.00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각 변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사후검정에서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와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각 변인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현 정부 심판론’에서는 평균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77, SD=0.89$)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50, SD=0.93$)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03, SD=1.0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갈등’에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68, SD=1.20$),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59, SD=0.90$),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34, SD=1.02$) 순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도 영향의 크기가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되었는데, 이는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내부 갈등 여파가 여당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도 크게 미쳤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에서도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85, SD=0.96$),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69, SD=0.91$),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26, SD=1.09$) 순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도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갈등’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47, SD=1.08$)에서 가장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2.941, p=.054>.05$).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 ($M=3.47, SD=1.05$)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09, SD=0.96$)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06, SD=1.00$)와 비교해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F=2.552, p=.079>.05$).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에 있어서는 각 집단의 평균치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⁷⁰⁾,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75, SD=1.19$)에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47, SD=0.90$),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10, SD=1.01$) 순을 보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52, SD=1.1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 ($M=2.09, SD=0.79$),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1.99, SD=0.98$) 순으로, 이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이슈 요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와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입국소식’ 이슈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 등의 이슈가 민감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갈등’을 비롯해 ‘새누리당 막 말논란 및 옥새과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갈등’,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심판론’ 이슈가 실제 투표결정요인으로 상당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투표후보와 지역이슈 영향인식

지역이슈에서는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F=10.163, p=.000<.001$),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F=7.736, p=.000<.001$),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F=15.407, p=.000<.001$)에서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변인들의 차이를 2차적으로 사후검정하기 위해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

70) ‘북한 미사일 발사뉴스’와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입국소식’은 3개 집단 모두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에서는 새누리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평균치가 크게 높았다.

변인별로 살펴보면,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에서는 평균치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57$, $SD=0.98$)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16$, $SD=0.88$)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09$, $SD=1.03$) 보다 크게 높았고 이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34. 투표후보 선택과 지역이슈 분산분석

지역이슈	투표한 후보	빈도(명)	평균	SD	F	P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	새누리당 후보	137	3.57	0.98	10.163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16	0.88		
	국민의당 후보	34	3.09	1.03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새누리당 후보	137	3.52	0.96	0.149	.862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48	0.97		
	국민의당 후보	34	3.56	1.05		
제주도 후보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새누리당 후보	137	3.34	0.88	2.786	.063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40	0.95		
	국민의당 후보	34	3.00	1.10		
제주도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새누리당 후보	137	3.61	1.05	0.533	.587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67	0.95		
	국민의당 후보	34	3.50	0.96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새누리당 후보	137	2.85	1.00	7.736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21	1.00		
	국민의당 후보	34	2.79	0.95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새누리당 후보	137	3.01	1.02	1.882	.153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19	0.98		
	국민의당 후보	34	3.00	1.04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	새누리당 후보	137	2.92	0.99	15.407	.000***
	더불어민주당 후보	337	3.44	0.94		
	국민의당 후보	34	3.06	0.85		

(***p<.001, **p<.01, *p<.05)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21$, $SD=1.00$)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85$, $SD=1.00$)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79$, $SD=0.95$)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

군기지 구상권 청구 논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44$, $SD=0.9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06$, $SD=0.85$)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92$, $SD=0.99$)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있어서는 평균치가 대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56$, $SD=1.05$),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52$, $SD=0.96$),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48$, $SD=0.97$)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149$, $p=.862>.05$).

'후보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40$, $SD=0.95$),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34$, $SD=0.88$),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00$, $SD=1.10$) 순을 보였으며 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2.786$, $p=.063>.05$).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은 평균치가 모두 높게 나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67$, $SD=0.95$),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61$, $SD=1.05$),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50$, $SD=0.96$) 순을 보였다($F=.533$, $p=.587>.05$).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20대 총선에서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이 민감한 이슈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3.19$, $SD=0.98$),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3.01$, $SD=1.02$),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3.00$, $SD=1.04$) 순으로 평균치가 높았으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1.882$, $p=.153>.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이슈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에서는 '현역의원 교체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논란',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과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이 투표결정에 크게 작용한 이슈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3) 지지후보 변경과 중앙/지역 이슈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중앙/지역 이슈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에서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150, p=.024<.05$).

‘현정부 심판론’($F=.100, p=.752>.05$), ‘새누리당 공천갈등’($F=3.676, p=.056>.05$),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F=1.475, p=.225>.05$), ‘더불어민주당 공천갈등’($F=2.164, p=.142>.05$),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뉴스’($F=.171, p=.680>.05$),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입국소식’($F=.212, p=.645>.05$) 등의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중앙이슈 요인에서 지지후보를 변경했다는 유권자의 평균치가 바뀐 적이 없다는 유권자 보다 높게 나타났고, 각각의 이슈요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영향인식 정도의 값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지지후보 변경과 이슈요인 간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돌출된 이슈요인들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지지후보를 변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표 35.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중앙이슈 분산분석

중앙이슈	지지후보 변경	빈도(명)	평균	SD	F	P
현 정부 심판론	있다	177	3.52	0.94	0.100	.752
	없다	407	3.49	1.02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있다	177	3.61	0.89	3.676	.056
	없다	407	3.44	0.99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있다	177	3.62	0.97	1.475	.225
	없다	407	3.51	0.99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있다	177	3.32	0.88	2.164	.142
	없다	407	3.20	0.90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심판론	있다	177	3.25	0.95	5.150	.024*
	없다	407	3.05	0.97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	있다	177	2.37	1.09	0.171	.680
	없다	407	2.33	1.09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있다	177	2.20	1.05	0.212	.645
	없다	407	2.16	1.06		

(***p<.001, **p<.01, *p<.05)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F=4.664, p=.031<.05$)은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 보다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추

론해 볼 수 있다.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F=2.255, p=.134>.05$),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F=1.181, p=.278>.05$),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F=3.180, p=.075>.05$), ‘원희룡 마케팅’($F=.657, p=.418.>05$),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F= 2.088, p=.149>.05$),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논란’($F=.459, p=.498>.05$) 등의 요인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시된 지역이슈 요인에서도 지지후보 변경 유권자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되었다.

표 36. 지지후보 변경 여부와 지역이슈 분산분석

지역이슈	지지후보 변경	빈도(명)	평균	SD	F	P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	있다	177	3.35	0.97	2.255	.134
	없다	407	3.22	0.92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있다	177	3.60	0.97	4.664	.031*
	없다	407	3.42	0.96		
제주도 후보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있다	177	3.42	0.95	1.181	.278
	없다	407	3.33	0.93		
제주도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있다	177	3.74	0.91	3.180	.075
	없다	407	3.58	0.99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있다	177	3.14	0.97	0.657	.418
	없다	407	3.07	1.00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있다	177	3.23	0.93	2.088	.149
	없다	407	3.10	1.01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	있다	177	3.29	0.88	0.459	.498
	없다	407	3.23	1.02		

(*** $p<.001$, ** $p<.01$, * $p<.05$)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선거기간 크게 분출되었던 중앙이슈 및 지역이슈의 각각의 요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영향의 정도를 크게 인식했던 유권자 층에서 지지후보 변경이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제5장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2016년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친 투표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0대 총선은 전국적으로 이변상황이 많았던 만큼 유권자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투표행태 이론적 논의에 새로운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투표결정 요인 측정항목을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별 세부 속성 유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슈요인 중 사회적·정치적 쟁점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중앙/지역 이슈 목록을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에서는 20대 총선의 제주도 유권자 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6년 8월14일부터 31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제주도 3개 선거구의 584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에서는 유권자의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지지후보 변경)는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성별, 연령, 학력, 소득,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미디어 이용시간(지역/중앙 일간지, TV, 인터넷, 소셜미디어)에 따른 유권자의 투표행태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3>에서는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선거정보 입수채널(신문, TV, 인터넷, 대인접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4>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투표결정 요인을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의 요인들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5>에서는 투표결정 요인 중 ‘이슈 요인’의 속성에 포함되었던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의 내용이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함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본 응답자들의 20대 총선에서 표출된 투표행태의 특이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시기는 선거 1주일 전(31.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선거일 보름 전후(22.7%)와 선거일 한 달 전후(22.4%), 선거일 두 달 전후(15.2%) 순으로 분석되었다. 선거 1주일 전이나 보름 전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 층(54.1%)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거쟁점이나 돌출적 이슈 등 특정요인에 의한 영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선거일 한 달 또는 두 달 전후한 시점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층(37.6%)의 경우는 영향요인이 적었던 층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둘째, 지지 후보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69.7%가 ‘바꾼 적 없다’고 했고, 30.3%는 찍고자 하는 후보를 바꿔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후보자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고려사항으로는 지지후보의 자질(도덕성)/능력/경력(5.0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정당(4.24)과 공약사항(3.92), 주위의 평판/이웃의 조언(3.22), 당선가능성(2.81), 학연/지연/혈연(1.76) 순으로 조사되었다. 후보자의 자질/능력/경력 등 인물요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소속정당, 공약사항, 주위의 평판이나 이웃의 조언을 두루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선거기간 중 1주일간 하루 평균 뉴스이용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TV 뉴스가 51.61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폰 47.54분, 인터넷 47.13분, 그리고 소셜미디어 46.00분, 중앙일간지(종이신문)는 28.08분, 지역일간지(종이신문) 27.50분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총선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입수 채널 조사에서는 TV뉴스(3.67),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3.33), 인터넷신문(3.28), 포털뉴스(3.2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앙일간지(2.30)나 지역일간지(2.58) 등 종이신문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는 응답자 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섯째,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투표결정 요인 조사(5점 척도) 결과, <후보자 요인>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경력·학력 등’(3.99),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3.84),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3.79),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3.48) 등이 다른 요인에 비해 평균치가 높게 나왔다. 반면, ‘후보자의 외모·말투·태도 등’(2.99),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2.42)에 대한 영향정도는 낮게 평가했다. <정당 요인>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3.51)와 ‘정당 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3.07)이 다른 항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2.94),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2.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슈 요인>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3.53)과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 내용’(3.44)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선거공약(공보물)’(2.77)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디어 요인>에서는 ‘TV토론 내용’(3.27), ‘언론의 논평, 사실이나 뉴스 내용’(3.19),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3.01)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내용’(2.07)은 영향정도가 낮았다.

일곱째, <이슈 요인>에 있어 중앙이슈와 지역이슈에 대한 영향력 인식정도를 조사한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과동’(3.54), ‘현 정부 심판론’(3.50), ‘새누리당 공천 갈등’(3.49),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3.24),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민주당 심판론’(3.11) 순으로 영향이 컸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3.63),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3.47), ‘제주도 후보 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3.35) 순으로 영향력 정도를 평가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1>의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에 따른 투표행태 차이 검증을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투표후보 선택과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한 결과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정치적 성향에서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연령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는 40대와 30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01$). 학력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고졸 이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대학 재학생과 대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p < .01$). 소득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월 299만원 이하에서 많았다($p < .01$).

정치성향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두드러지게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았다.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중도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이 비슷한 수준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p < .001$).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성별의 경우에는 새누리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남성이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는 여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 > .05$).

둘째, 지지후보 변경과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지지후보를 변경한 경험은 여성 유권자에서, 20대 이하와 30대, 50대에서, 대학 재학 또는 대졸에서, 월 199만원 이하와 299만원 이하에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보수적 또는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서 지지후보 변경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지지후보 변경과 성별($p > .05$), 연령($p > .05$), 학력($p > .05$), 소득($p > .05$), 정치성향($p > .05$) 간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문제 2>의 미디어(지역/중앙 일간지, TV, 인터넷, 소셜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의 차이 검증에서는 상호 간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일간지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 30.62분

($SD=26.26$)으로 가장 높았고, 중앙일간지의 경우 국민의당 후보투표자가 31.43분($SD=38.35$)으로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TV 뉴스 하루 평균 이용량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가 56.52분($SD=34.63$)으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가 44.22분($SD=32.06$),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 54.38분($SD=57.62$)으로 각각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지후보 변경여부와 미디어 이용시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서 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리해 본다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은 지역일간지와 TV뉴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중앙일간지 이용시간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종이신문 보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TV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3>에서는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선거 정보 입수채널(신문, TV, 인터넷, 대인접촉)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선거정보 입수채널 유형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문 요인’, ‘TV 요인’, ‘인터넷 요인’, ‘대인접촉 요인’ 등 4가지 차원의 요인 중 ‘인터넷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001$). 인터넷 요인에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96$, $SD=0.85$)와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95$, $SD=0.89$)가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M=2.41$, $SD=0.97$)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집단별 차이를 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보다 더 많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요인($p>.05$)이나 TV요인($p>.05$), 대인접촉 요인($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신문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 비해 신문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보입수 채널로서 TV뉴스의 이용 비중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순으로 의존도가 높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록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된 요인이 ‘인터넷’에 국한돼 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 입수 통로로서 TV와 인터넷 매체 뉴스와 정보, 주변의 의견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 간에 선거정보 입수채널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 4>에서는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영향을 준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투표결정요인을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으로 분류하여 이의 요인들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는데, 이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후보자 요인($p<.05$), 미디어 요인($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평균치가 3.53($SD=0.58$)으로, 다른 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TV토론, 언론의 논평·사설, 여론조사 등을 아우르는 ‘미디어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M=2.99$, $SD=0.76$)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M=2.87$, $SD=0.69$)나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M=2.65$, $SD=0.9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당 요인’과 ‘이슈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 요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 비해 평균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이슈 요인’에 있어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 비해 높은 평균값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를 종합한다면, 투표결정요인에 있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은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정당요인을,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은 이슈 요인을 상대적으로 많이 고려해 투표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투표결정 요인에 있어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변경하지 않은 유권자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후보자 요인’($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지지후보 변경을 경험한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후보자의 자질, 지역발전 기여도, 이미지, 외모, 말투 등 후보자 요인 요소를 더 중요시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당 요인($p>.05$)이나 이슈 요인($p>.05$), 미디어 요인($p>.05$)에 있어서는 지지후보를 변경하거나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문제 5>에서는 투표결정 요인 중 ‘이슈 요인’의 속성에 포함되었던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을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로 구분하여 세부 유목 요인을 설정한 후,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중앙/지역 이슈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p<.001$),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p<.05$),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p<.001$),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p<.001$),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각 변인들의 차이를 보기 위해 사후검정에서 Waller-Duncan의 동일 집단군 형태를 확인해본 결과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서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와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이슈에서는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p<.001$),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p<.001$),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p<.001$)에

서 상호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의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에서는 새누리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평균치가 크게 높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지역이슈들까지 포함해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현역의원 교체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논란’, 국민의당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과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중앙/지역 이슈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에서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 < .05$). 나머지 이슈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지후보를 변경했다는 유권자의 평균치가 바꾼 적이 없다는 유권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p < .05$)에서 지지후보 변경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간 차이가 확인됐다.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 보다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있어 평균치가 높았다. 나머지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에서 상대적으로 요인별 평균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선거기간 크게 분출되었던 중앙이슈 및 지역 이슈의 각각의 요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영향의 정도를 크게 인식했던 유권자에서 지지후보 변경으로 이어졌을 것이란 추정을 해 볼 수 있다.

2. 결론 및 함의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 및 함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제20대 총선에서 제주지역 유권자들 중 상당수가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였고, 30% 정도는 지지후보를 변경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번’의 선거결과가 나타났던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투표후보 결정시기 조사결과를 보면, 선거 1주일 전(31.4%)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선거일 보름 전후(22.7%)와 선거일 한 달 전후(22.4%), 선거일 두 달 전후(15.2%)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 1주일 전이나 보름 전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 층은 선거쟁점이나 돌출적 이슈, 후보자 요인 등에 의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층이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선거일 한달 또는 두 달 전에 투표후보를 결정했다는 유권자 층은 돌출적 요인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선거기간 중 지지후보 변경여부와 관련해서는, 바꾼 적이 있다 30.3%, 바꾼 적 없다 69.7%로 조사되었는데, 이 또한 투표후보 결정시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 층은 선거 막바지에 돌출된 각종 쟁점이나 후보자 요인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한 유권자들과 지지후보 변경 유권자들이 접전으로 치닫던 선거 막바지에 이번의 선거결과를 만든 ‘결정적 투표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20대 총선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후보 선택기준에서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주의 고려정도는 크게 낮아지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영향정도는 예상 외로 크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의 논의를 좀 더 확장해 나갈 필요성을 갖게 한다.

투표를 할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시한 사항으로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포함한 ‘자질·능력·경력’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속정당’과 ‘공약사

향’, ‘주위의 평판/이웃의 조언’ 순이었다. 반면 ‘당선 가능성’ 및 ‘학연·지연·혈연’은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민선 지방자치시대 이후 제주도 선거에서, 특히 제주도지사 선거를 비롯한 지방의회 선거에서 오랜 기간 ‘연고주의’나 ‘조직선거’⁷¹⁾ 분위기가 크게 나타났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유권자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투표결정 요인(후보자, 정당, 이슈, 미디어요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후보자 요인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경력·학력 등’과 후보자의 능력을 의미하는 ‘지역발전 기여도’, 그리고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순으로 영향정도가 컸다. 그러나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은 후보자 요인 6개 항목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당 요인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가 가장 높았고, 이슈요인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이 가장 높았다. 미디어요인에서는 ‘TV토론 내용’이 가장 높았는데,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요인에 비해 평균값이 낮게 나왔다.

후보자의 자질·능력 등 인물요소나 이슈·쟁점, 주위의 평판 등이 투표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 반면, 혈연·지연·학연과 같은 연고주의 내지 조직선거 요소의 영향정도가 작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연고주의 투표경향의 감소는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도의 유입 이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또 20대 총선 과정에서 ‘전직 도지사의 선거개입 논란’과 ‘원희룡 마케팅’ 논란이 불거져 야권 후보를 중심으로 ‘구태정치 청산’ 이슈가 전면에 등장했던 것도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위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후보자 선택기준의 ‘당선가능성’, 그리고 투표결정 요인 중 미디어 요인 항목인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값이 다른 요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전략적 투표’에 대한 논의를 이어볼 수 있다.

71) 이 연구에서 언급한 ‘조직선거’는 과거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주로 나타났던 읍·면·동 지역별, 혈연, 학연 등의 사조직을 활용한 특수한 선거방식의 양태를 의미하며, 제주도 지역정치에서는 이러한 조직선거를 ‘구태정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 같은 일반적 선거조직과는 구별된다고 하겠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는 후보 결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나 당선가능성의 영향 정도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이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으나, 우선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1곳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대결, 나머지 2곳은 국민의당 후보가 뒤늦게 가세해 3자대결로 이뤄졌으나 판세는 사실상 2파전 접전 승부로 고착화되었던 점, 이러한 가운데 잦은 신뢰성 문제를 빚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는 막바지에는 ‘초박빙’으로 나타나면서 판세에 따른 표심이동 보다는 유권자 자신이 나름대로의 선택기준에 의한 합리적 투표 혹은 ‘소신투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여론조사 결과의 지지도나 당선가능성에 따른 표심이동 영향이 적었다는 것으로, 판세에 따른 영향 보다는 이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 2위간 백중세의 판세가 고착화된 상황에서는 3위 이하 후보 지지층에서 전략적 투표나 결정적 투표가 나타날 수도 있으나, 20대 총선의 실제 투표에서는 그러한 양태의 이동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⁷²⁾. 오히려 선거 막바지 혼전상황에서 1, 2위 후보를 지지하던 유권자층 또는 부동층의 일부에서 3위 후보로의 전략적 선택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백중세의 박빙 상황에서는 3위 후보 지지층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의 ‘결정적 투표’가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 기존 학설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대목으로, 이에 대한 추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넷째, ‘정치적 성향’에 따른 투표후보 선택이나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 차이가 확인된 점도 주목하고자 한다.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과 투표행태 간의 차이 검증에서는 연령, 학력, 소득, 그리고 정치적 성향의 변인이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령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는 40대와 30대에서,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는 20대 이하와 40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치성향에 있어서는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

7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총선 개표결과, 제주시 갑 선거구의 국민의당 후보는 15.9%(3위), 제주시 을 선거구의 국민의당 후보는 11.5%(3위)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선거 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때의 지지율보다도 훨씬 높아진 수치로, 선거 막바지에 3위 후보 지지층 유권자에서 전략적 투표 등에 의한 이탈이 적었음을 보여준다.

서는 새누리당 후보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적이고 생각하는 유권자에서는 국민의당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이나 정치성향에서 나타난 이러한 투표후보 선택의 특징은 ‘정당 일체감’ 요인이 강하게 표출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지지후보 변경여부에 있어서, 중도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에서 지지후보 변경이 많이 이뤄진 반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변경 보다는 기존 지지후보를 이어나간 비율이 높았던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후보별 득표율의 결과와도 일정부분 부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일 6일전에 발표된 제주도 3개 선거구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기관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대체적으로 3곳 중 2곳은 초박빙 접전, 1곳은 새누리당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 초박빙 접전을 예상했던 2곳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완승’, 새누리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던 곳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초경합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은 비교적 견고하였던 반면, 새누리당 지지기반이었던 보수적 성향 유권자에서도 지지후보 변경이 적지 않게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투표결정 요인에 있어서 미디어 이용시간 및 총선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었는지에 대한 정보입수 채널 유형에 따른 투표행태(투표후보 선택 / 지지후보 변경) 차이 검증에서는 유권자들의 미디어 이용경로와 관련한 일부 의미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선거기간 중 1주일간 하루 평균 뉴스이용 시간은 TV뉴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휴대폰,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 중앙일간지(종이신문), 지역일간지(종이신문)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 정보입수 채널 조사에서는 TV방송 뉴스, 친구나 주위 사람들과 대화,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중앙일간지나 지역일간지 등 종이신문을 통해 정보를 입수한다는 응답자층은 현저하게 낮았다.

투표할 후보선택과 미디어이용 시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으나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은 지역일간지와 TV뉴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

고 있었고,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중앙일간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종이신문 보다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TV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선거정보 입수채널 유형에 따른 유권자 집단 간 차이 검증에서는 인터넷신문, 포털뉴스, 소셜미디어 등을 아우르는 ‘인터넷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선거정보를 입수하는데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 보다 인터넷 요인의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의 정보입수 채널은 ‘종이신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검증결과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미디어 이용시간이나 선거정보를 입수하는 채널로서 유권자의 매체 이용은 TV뉴스나 휴대폰, 인터넷, 소셜미디어 순으로 높은 반면, 종이신문 이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입수 채널에서는 미디어 못지않게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라는 대인접촉 방식이 영향정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여섯째, 유권자들이 투표후보를 선택하거나 지지후보를 변경할 때 영향을 준 투표결정요인에 대한 체계적 검증이 이뤄진 것은 이번 연구의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연구 결과 유권자들이 투표결정을 하는데 있어 고려한 요인의 영향정도 크기는 ‘후보자 요인’에서는 △후보자의 자질·경력·학력 등,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등의 순으로, 이들 요인 항목별 측정 평균값은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반면 △후보자의 외모·말투·태도, △후보자의 출신지역·혈연·학연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당 요인’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 △정당 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이 높게 나타났고, ‘이슈 요인’에서는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미디어 요인’에서는 △TV토론 내용, △언론의 논평, 사설이나 뉴스 내용

등이 높았고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내용은 영향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가운데,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각각의 요인에 대한 유권자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 비해 이의 요인 항목들을 더 많이 고려해 투표결정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으나 ‘정당 요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이, ‘이슈 요인’에서는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의 고려 정도가 높았다.

이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들은 후보자 요인과 미디어 요인을,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들은 정당요인을,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들은 이슈요인에서 영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주목되는 부분은 지지후보 변경과 관련하여 ‘후보자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됐다는 점이다. ‘후보자 요인’에서 지지후보를 변경했다는 유권자의 평균치는 지지후보를 바꾼 적 없다는 것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지후보 변경이 ‘후보자 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많이 나타났을 것이란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정치성향’ 중 중도 및 보수적 성향 유권자 층에서 지지후보 변경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위의 ‘후보자 요인’의 영향정도는 새누리당 투표자에서 컸다는 점 등과 연관시켜 살펴볼 때 결국 ‘후보자 요인’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지지 후보 변경 등 ‘이탈 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대 총선에서 제주도 선거의 참패의 원인 설명과도 직결될 수 있다.

일곱째, 앞의 투표결정요인의 4가지 중 ‘이슈 요인’의 사회적·정치적 쟁점 유목을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로 구분하여 투표행태와의 차이 검증에서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과동,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공천 갈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민주당 심판론 순으로 영향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선거법 위반 고소,

고발 등에서 영향력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적 현안이나 정책적 쟁점 보다는 선거기간 중 돌출됐던 갈등·논란 이슈들에서 영향 정도가 크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투표후보 선택에 있어 유권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중앙이슈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 △새누리당 공천 갈등, △새누리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에서 영향정도가 컸고,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와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 입국소식’ 등의 안보이슈에서 영향정도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갈등’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투표자 순으로 영향정도가 컸는데, 새누리당 투표자에서도 평균치는 비교적 높았다. 이는 새누리당 내 공천을 둘러싼 계파간 내부갈등의 여파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이슈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영향정도가 컸던 이슈 중 안보이슈를 제외하면 모두 새누리당의 ‘악재’ 성격의 요소들이란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새누리당 ‘악재’ 이슈들이 민감하게 작용하면서 새누리당에는 악영향이,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사이득의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이슈에서는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논란’ 영향정도가 컸고,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후보 투표자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과 ‘일부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논란’,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등은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 영향정도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지역이슈 영향정도를 정리해본다면, 새누리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현역의원 교체론’, 더불어민주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원희룡 마케팅 논란’과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논란’, 국민의당 후보 투표자에서는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과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이슈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지후보 변경에 있어서는 중앙이슈에서 '국민의당의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이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국민의당에서 선거 쟁점프레임으로 제기한 '거대 양당 심판론'의 이슈요인에서 지지후보 변경 유권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이 결과는 실제 20대 총선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돌풍을 일으킨 국민의당 '약진'의 주요 원인으로 '거대 양당 심판론'이 유권자 설득에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이슈에서는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서 지지후보 변경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재산신고 누락 논란의 영향으로 지지후보를 변경한 유권자가 많게 나타났는데, 실제 선거에서는 이 논란을 초래한 새누리당 후보 2명이 모두 낙선하였다. '일부 후보자의 자질 부족'이나 '전직 도지사의 선거개입'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지지후보 변경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 보다 많게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선거기간 크게 분출되었던 중앙이슈 및 지역이슈의 각각의 요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지후보 변경이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수많은 선거쟁점 속에서 '재산신고 누락'이나 '후보자 자질 논란',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등 새누리당 후보에 불리한 이슈 요인들이 크게 표출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반면, 새누리당에서 제기한 '현역의원 교체론'은 이러한 영향요인에 묻혀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면서 선거는 결국 야당의 승리로 귀결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유권자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요인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특정지어 설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후보자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 미디어 요인 차원의 각각의 세부 변인에서 영향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인구통계 사회적 특성변인이나 선거관련 정보나 뉴스를 주로 입수한 채널 유형에 따라서도 투표행태는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완승'과 새누리당의 '참패', 국민의당의 '약진'이라는 20대 총선의 결과는 어느 특정한 한 가지 요인에서 비롯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20대 총선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친 투표결정 요인을 규명할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그 중에서도 선거 막바지에 유권자들이 투표후보 결정이나 지지후보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내용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는 전국선거의 ‘바로미터’로 불리우는 제주도 광역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고, 특히 국내 연구에서도 좀처럼 시도되지 않았던 중앙이슈와 지역이슈들을 동시에 검증하는 방법을 통해 유권자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결과를 도출해 냄으로써 이번 연구의 성과는 적지 않다고 하겠다.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0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 요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시도는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연구 결과 및 성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주도 투표행태 연구의 첫 시작임과 동시에, 앞으로 다양한 차원의 논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고, 투표행태 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움 내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표본 구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표본의 구성은 제주도 3개 선거구의 실제 유권자 수, 연령별, 성별 비율에 비례하여 추출하였다. 이 결과 인구통계학적 요소의 실제 비율에 상당부분 근접하여 표본 선정이 이뤄졌으나, 전체 표본 수가 584명(제주시 갑 230명, 제주시 을 203명, 서귀포시 151명)으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유권자 투표행태 유형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뿐만 아니라, 선거구별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본의 수를 확장해야 타당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요

소에 맞춰 표본을 구성한 결과 투표한 후보별이나 정당별 비율에 부합시키지 못한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인구통계학적 요소(선거구별, 성별, 연령별) 비율에 따라 표본선정을 한 기존 연구들(이상목, 2011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응답자들을 투표한 후보별로 집단화해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문제 검증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유권자 개인의 투표행태 특성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투표후보나 투표정당의 비율을 실제 개표결과 비율에 준해 표집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있어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기 위해 집단 간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검증하는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현상이 발생한 구체적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점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회귀분석과 같은 고급통계 등 분석방법을 다양화해 나가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투표행태와 관련한 다양한 결과는 20대 총선이라는 단일 선거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선거의 투표행태 논의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향후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 지방선거에서도 연구를 발전적으로 진행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에서는 또한 이번 연구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던 투표결정 요인의 각 세부속성별 심층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다. 후보자 요인, 미디어 요인, 정당 요인, 이슈 요인뿐만 아니라 인구통계 사회적 변인속성의 유권자 요인, 혹은 투표결정 시기 등의 변인을 갖고서도 독립적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강병효 (2011). <전국과 지역방송의 선거캠페인 보도 비교 분석: 6.2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영철 (2011). 지방선거에서 지역언론의 지향점. <사회과학연구>, 2권 2호, 87-111,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고영철·최낙진 (2007). 미디어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5. 7. 27.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편안 주민투표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7호, 5-46.
- 권혁남 (1997). <한국언론과 선거보도: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현실논리>. 서울: 나남
- _____ (2006). <미디어 선거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_____ (2009). 텔레비전의 15대 16대 대통령선거 보도 비교 분석.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2호, 45-91.
- 김동석 (2012). <유권자 투표행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관규 (2008). 대학생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 행동: 2008년 제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언론과학연구>, 8권 4호, 187-221.
- 김광우 (2010). <방송보도의 의제형성과 내부 의사결정의 연계성 연구: 제주지역의 2010년 광역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성호 (2007). <선거운동 방법으로서의 성명서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호 (2007). <제주지방선거사>. 제주: 도서출판 세림.
- 김용호·김경모 (2000). 유권자의 선거관련 매체이용이 선거관세 인식과 전략적 투표행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언론학보>, 45권 1호, 91-120.

- 김용호 (2009). 유권자 선거관세인식과 전략투표행동에 대한 매체이용 효과의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9권 2호, 243-280.
- 김인경·박진우 (2008). 옥외 정치광고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효과: 명함형 정치광고와 벽보용 정치광고를 중심으로. <옥외광고학연구>, 5권 1호, 157-171.
- 김재전 (2008). <한국지방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5.31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재한 (2011). 투표율의 연령효과 및 도농효과. <대한정치학회보>, 18집 3호, 183-206.
- 김진호·김성수(2006). 제주도지사 재보궐 선거(2004년 6월 5일)의 승패요인 분석. <법과 정책>, 12권 1호. 161-196.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희정·최낙진 (2011). 지역신문 광고에 나타난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특성: 제주 A형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3권 3호, 267-297.
- 김춘식 (2013). 선거 뉴스와 미디어선거캠페인 노출이 정치 지식과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오프라인·온라인 시민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매개 역할 검증.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215-250.
- 남인용 (2013).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효능감,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참여와 후보자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1호. 127-154.
- 민 영 (2006). 정치광고의 이슈현저성과 후보자 선호도에 대한 효과: 이슈소유권(issue ownership)과 네거티브 소구(negative appeal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5호, 108-131.
- 민태은 (2015). 한국인의 온라인 미디어 활용과 오프라인 정치참여. <국가전략>, 21권1호, 107-140.
- 박태서 (2010). <텔레비전뉴스의 선거여론조사보도양식에 대한 연구: 2002/2007대선, 2004/2008총선보도 비교분석>. 세종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천호 (2008). 미국 정당의 양극화 현상과 분할투표 결정요인의 변동에 관한 연구: 피오리나(Marris P. Fiorina)의 정책균형 분할투표 이론을 중심으로. <미국학>, 31권 2호, 293-326.
- 반현·최원석·신성혜 (2004).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뉴스 미디어의 점화효과. <한

- 국방송학보>, 18권 4호, 398-443.
- 변동구 (2004). <낙선·지지운동이 17 총선의 투표율에 미친 향에 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상국 (201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2009년 경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서영남 (2012). <투표 참여와 정당 선택의 예측 변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 선거 사례 분석>.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건섭·이근수 (2011).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권 3호, 49-71.
- 송건섭 (2015).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후보자 선택모델: 지방선거조사의 종단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권 4호, 111-135.
- 송종길·박상호 (2005). 정치적 불만과 미디어 이용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7대 총선의 정치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07-333.
- _____ (2009). 17대 대통령 후보 TV토론이 유권자의 태도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6호, 87-103.
- 송종길·고삼석·박상호 (2010). 제17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미디어 신뢰도와 정치행태에 관한 연구: 정치 신뢰도, 부정주의, 정치 정보효능감을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6호, 101-135.
- 송현주·김현석·이준웅 (2008). 대통령 후보 경선 여론조사보도에 대한 인지평가와 정서 반응이 정치적 행동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354-376.
- 신재선 (2012).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이 정치 효능감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19대 총선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진 (2008).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관한 연구: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6권 2호, 255-278.
- 안중근 (2011). <유권자의 이념 성향과 정당투표: 17대와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길현(2006). 5.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후보공천과정. <평화연구>, 17권

- 1호, 157-199.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권 2호, 149-170.
- 이강형 (2007). 선거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개관: 투표행태 연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권 1호, 1-36.
- 이동규 (2013). <유권자들의 특성에 따른 지지후보 결정시기에 관한 연구: 인구 사회학적 속성, 정치성향, 미디어이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묵 (2011).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2011.4.27.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상휘 (2006). 투표의 쏠림현상에 대하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0집. 357-386.
- 이소영 (2012). 4.11 총선과 SNS 선거캠페인.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2012년 9월), 97-122.
- 이수범 (2001). 텔레비전 방송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2001년 10월), 9-22.
- 이재일 (2007). <유권자의 재·보궐 선거 투표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07년 4월 25일 재·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웅 (1998). 후보 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3권 22호, 243-284.
- 이준호 (2014). 정치광고가 정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34호, 53-97.
- 이지선 (2007). <한국의 부동층 유권자 투표행태 연구: 16대 대선·17대 총선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현우 (2011). 제5회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와 유권자 평가. <선거연구>, 1권 1호, 37-64.
- 이학식·임지훈 (2012). <BASIC SPSS MANUAL: 기초사용자를 위한 입문서>. 서울: 도서출판 집현재
- 이효성 (2008). 18대 총선과 지역 언론의 보도 패턴—폭로저널리즘과 여론조사

- 보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1호, 123-150.
- 임양준 (2013).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미디어 효과연구: 제 19대 총선에 대한 제3자 효과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183-219.
- 전재섭 (2009).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 유권자의 정당선호,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대연(1996). 제주도민의 선거 행태. <제주리뷰>, (창간호).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 정성호 (2003). <TV토론이 유권자의 인지변화 및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16대 대통령선거 TV토론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용복 (2014). <미디어 이용 특성이 지역사회자본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인태 (2012).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홍보매체의 효과 및 선거 PR 캠페인 전략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24호, 133-176.
- _____ (2013a). 선거 캠페인 법정 홍보매체의 후보자 결정요인과 투표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4·11 부산지역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7권 2호, 239-271.
- _____ (2013b). 선거매체 유형과 투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6·2지방선거, 4·11 총선, 12·19대통령 선거 비교. <언론과학연구> 13권 4호, 549-589.
- 정진민 (2012).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21.
- 조기숙 (1996).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13). '정당지지'에 기초한 선거예측 종합모형: 19대 총선의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7권 4호, 71-92.
- 조진만·최준영 (2006). 17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정보학회>, 9권 1호, 203-2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3, 30).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16, 4, 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
- 지병근 (2013). 제19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결정요인의 연령별 다양성. <한국선거학회>, 3권 1호, 49-72.
- 차배근 (1990). <사회과학연구방법(전정판)>. 서울: 세영사
- 최미경 (2011). 한국 투표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2권 2호, 81-99.
- 최삼경 (2011).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신뢰도와 정치태도·참여에 관한 연구: 6.2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언론진흥재단(2016). <2015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제20회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행태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길리서치 (2016, 4, 7).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 허일수 (2011).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행태와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 : 뉴미디어이용, 정치성향, 정치효능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 근 (1993). <유권자의 정치적 圖式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1). 방송의 선거 이슈보도의 특성과 문제점.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2001년 10월), 23-46.
- Berelson, Bernard, Lazarsfeld Paul, McPhee William. (1954). *Voting*.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G. Gurin, W. 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Evanston: Row, Peterson and Co.
- Campbell, A., P.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Downs, Anthony. (1957). *an Econon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박상훈·이기훈·김은덕 (역) (2013).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Fiorina, Morris P. (1981). *Restro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zarsfeld, Paul, Bernard Berelson, and Helen Gaudet. (1944). *The People's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백영민 (역) (2015). <국민의 선택: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유권자는 지지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Newman, B.(1994). *The marketing of the president: Political marketing as campaign strategy*. 김충현·이수범 (역) (2000). <대통령 선거 마케팅:클린턴의 캠페인 전략과 정치마케팅>. 서울: 나남출판.
- Petrocik, J. R.(1996). Issue ownership in presidential elestions, with a 1980 Case study. *American Jouranl of Political Science*. 40(3), pp. 825-850.
- Severin, Werner J., Tankard, James W. (2001). *Communication Theories: Origins, Methods, and Uses in the Mass Media*(5th ed.). New York: Longman. 박천일·강형일·안민호 (역)(개정판) (2004). 서울: 나남.
- Stokes, D. E. (1966). Some Dynamic Elements of Contest for the Presiden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0, pp. 19-28.

2. 언론 뉴스기사

- 조선일보 (2016, 4, 14). <靑은 불통, 與는 ‘이한구표 공천’ 내전…보수층마저 등 돌렸다>
- 조선일보 (2016, 4, 14). <‘성난 민심’ 원내 제1당도 갈아치워…‘여소야대 새누리당 심판했다’>
- 조선일보 (2016, 4, 15) <총선 참패 부른 새누리의 6가지 장면>
- 제민일보 (2016, 4, 14). 사실 <원 지사도 민심 무겁게 받아들여야>
- 제민일보 (2016, 4, 14). [20대 총선 무엇을 남겼나] <정권 불심감 팽배 ‘견제와 감시’ 선택>
- 제민일보 (2016, 4, 14). <민심 ‘오만·분열’의 집권여당 심판했다>

제주신보 (2016, 4, 15). <4·13 총선, 도내 정가에도 후폭풍 예고>
 제주신보 (2016, 4, 15). <오만을 심판한 民心 >
 한겨레 (2016, 4, 14). [사설] <반성하지 않으면 ‘레임덕 속도’만 빨라진다>
 한겨레 (2016, 4, 14). <야권분열의 역설…여당에 어부지리커녕 전략투표 흡수>
 한겨레 (2016, 4, 15). <맘 급했던 박 대통령 광폭 ‘무리수’ 행보>
 한라일보 (2016, 4, 14). [4·13 총선 의미와 과제] <인물론 도덕성 검증 여론 승부 갈라>
 한라일보 (2016, 4, 15). [사설] <제주발전 위한 큰 일꾼 다짐 행동으로 보여야>

<인터넷판 뉴스>

뉴스시스 (2016, 4, 7). <총선판세 종합: 새누리 140, 더민주 110+a, 국민의당 20+a ‘예측’>.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6_0014005703&cID=10301&pID=10300

동아일보 (2007, 5, 21). <대선 GIS보도 왜 의미있나>.

http://news.donga.com/Series/List_70000000000508/3/all/20070521/8444168/1

서울신문 (2016, 4, 11). <300석뿐인데…최선의 성적표는>.

<http://vote2016.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2005003>

오마이뉴스(2014, 2, 22). <‘제주판 3김 시대’ 이번엔 종식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60487&CMPT_CD=P0001

제민일보 (2013, 12, 2). <‘제주판 3김’ 종식 필요성 보여줬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371>

제주신보 (2012, 11, 16). <제주도를 위한 차기 대통령의 최소한의 조건>.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730>

헤드라인제주 (2016, 4, 11). <정책대결 ‘실종’…유권자는 뭘 갖고 판단하나>.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034>

헤드라인제주 (2016, 4, 14). <더민주 ‘완승’, 새누리 ‘참패’…어떤 숨은 변수 있었나>.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2372>

방송뉴스 ‘다시보기’ 모니터링 ; KBS제주방송총국, 2016, 3, 4~4, 12.

부록: 설문지

구 분				
--------	--	--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투표결정 요인 조사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제주지역 유권자 투표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한 본 설문지는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과정 논문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평소의 생각과 지난 선거에서 행하였던 대로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설문조사에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고영철 교수

◎ 조 사 자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원성심

◎ 연 락 처 : wss6944@hanmail.net

5. 귀하께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셨습니다?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새누리당 ② 더불어민주당 ③ 국민의당 ④ 정의당 ⑤ 기타 정당
⑥ 기권 / 투표하지 않았다

6. 귀하께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지후보를 결정할 때 아래의 항목중에서 어떤 점을 고려했는지, 가장 중요시한 순서대로 해당항목 괄호()안에 그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 () ①소속정당 () ②공약사항 () ③자질(도덕성)/능력/경력
() ④당선가능성 () ⑤학연/지연/혈연 () ⑥주위의 평판/이웃의 조언
() 기타 ()

7. 귀하께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언제 결정하셨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선거 당일 ② 선거 1주일 전 ③ 선거일 보름 전후 ④ 선거일 한달 전후
⑤ 선거일 두달 전후 ⑥ 투표 당일까지 결정하지 못해 기권

<표> 제20대 총선 선거일정 및 정치일정

2015년	2016년						
	선거일 두달 전후	선거일 한달 전후		선거일 보름 전후		선거일 1주일 전	선거 당일
12월15일	2월11~16일	3월10~13일	3월14~15일	3월24~25일	3월31일~ 4월12일	4월7일~ 4월13일	4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 (출마선언기 자회견 등)	후보자 공천 신청	후보경선 대상자발표 (컷오프탈락 자 결정)	후보경선 및 공천자 결정	후보자 등록 신청	공식선거 운동기간 (TV토론, 거리유세)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제20대 총선 선거일

8. 귀하께서는 찍고자 하는 후보를 바꾸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있다 ② 없다

9. 귀하께서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다음 중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보수적 ② 보수에 가깝다 ③ 중도 ④ 진보에 가깝다 ⑤ 진보적

10. 귀하께서는 아래 매체를 통해 1주일간 하루 평균 몇 시간 뉴스를 이용하는지 각 항목에 시간을 표시해주세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숫자 '0'으로 표시)

1) 종이 신문(지역일간지)	약 () 시간 () 분
2) 종이 신문(중앙일간지)	약 () 시간 () 분
3) 텔레비전 방송	약 () 시간 () 분
4) 인터넷(PC, 노트북)	약 () 시간 () 분
5) 휴대폰(스마트폰)	약 () 시간 () 분
6) 소셜 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등)	약 () 시간 () 분
7) 라디오 방송	약 () 시간 () 분
8) 기타(시사잡지 등)	약 () 시간 () 분

11. 귀하께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뉴스나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역일간지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2)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3) TV방송 뉴스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4) 종편 TV방송(조선, 매경, 동아, JTBC 등) 뉴스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5) 뉴스전문 방송 채널(YTN, 연합뉴스)을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7) 포털(다음, 네이버, 구글 등) 뉴스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8) 종이신문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9) 소셜 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등) 뉴스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10) 라디오방송 뉴스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11) 친구나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12) 후보자 TV토론을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13) 선거공보물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14) 후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해서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께서는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후보를 결정함에 있어 아래 항목들을 어느 정도 고려하셨습니다까?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표 해주세요

구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보통/ 조금 고려했다	대체로 고려했다	매우 많이 고려했다
1-1) 후보자의 자질, 경력, 학력 등	①	②	③	④	⑤
1-2) 후보자의 참신성과 좋은 이미지	①	②	③	④	⑤
1-3) 후보자의 지역발전 기여도	①	②	③	④	⑤
1-4) 후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	①	②	③	④	⑤
1-5) 후보자의 출신지역, 혈연, 학연	①	②	③	④	⑤
1-6) 후보자에 대한 주위의 평판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선호하는 정당소속 여부	①	②	③	④	⑤
2-2) 정당을 통해 입수된 후보자의 정보	①	②	③	④	⑤
2-3)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당	①	②	③	④	⑤
2-4) 정당간 대립·공방 등 정치적 상황	①	②	③	④	⑤
3-1) 선거 공약(공보물)	①	②	③	④	⑤
3-2) 후보자가 발표한 지역현안 정책내용	①	②	③	④	⑤
3-3) 사회적·정치적 이슈나 쟁점	①	②	③	④	⑤
4-1) TV토론 내용	①	②	③	④	⑤
4-2) 언론의 논평·사설이나 뉴스 내용	①	②	③	④	⑤
4-3)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①	②	③	④	⑤
4-4) 정당·후보자 정치광고 내용	①	②	③	④	⑤

13. 아래 항목들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 불거져 나온 사회적·정치적 주요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들이 귀하께서 특정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의 해당사항에 √ 표 해주세요

구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영향을 미쳤다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1) 현 정부 심판론	①	②	③	④	⑤
1-2)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 갈등	①	②	③	④	⑤
1-3) 새누리당 중앙당 막말논란 및 옥새파동	①	②	③	④	⑤
1-4)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 갈등	①	②	③	④	⑤
1-5) 국민의당의 새누리·더민주당 심판론	①	②	③	④	⑤
1-6)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 뉴스	①	②	③	④	⑤
1-7) 해외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입국소식	①	②	③	④	⑤
2-1) 제주도 현역의원 교체론	①	②	③	④	⑤
2-2) 일부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	①	②	③	④	⑤
2-3) 제주도 후보진영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①	②	③	④	⑤
2-4) 제주도 일부 후보자 자질부족 논란	①	②	③	④	⑤
2-5) 새누리당 후보의 '원희룡 마케팅' 논란	①	②	③	④	⑤
2-6) 전직 도지사 선거개입 논란	①	②	③	④	⑤
2-7) 해군기지 공사지연 강정주민 구상권 청구 논란	①	②	③	④	⑤
2-8) 제주4·3관련 논란 (4·3위령제 대통령 불참, 4·3희생자 재심사 등)	①	②	③	④	⑤
2-9) 감귤가격 폭락 등으로 민심 동요	①	②	③	④	⑤
2-10) 주택·토지 가격 상승 등 부동산시장 과열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통계 처리를 위하여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A1. 귀하의 성별은?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남 ② 여

A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만 세)

A3. 귀하의 최종 학력은?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학재학(전문대 포함) ④ 대졸(전문대 포함)
⑤ 대학원 재학 이상

A4.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은?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농수축산업(1차산업) ② 자영업 ③ 서비스업(관광업계 종사자 포함)/금융업
④ 공무원 ⑤ 전문직 ⑥ 학생 ⑦ 전업주부 ⑧ 무직 ⑨ 기타()

A5.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해당 항목에 √표 해주세요

- ① 소득없음 ② 99만원 이하 ③ 100~199만원 ④ 200~299만원
⑤ 300~399만원 ⑥ 400~499만원 ⑦ 500만원 이상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Study on Factors Affecting Voting Behaviors

: Republic of Korea's 20th Legislative Election, Jeju Focused

Won, Seong-sim

Department of Journalism and Public relations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ystemically and scientifically figure out factors affecting voting behaviors during the Republic of Korea's 20th legislative election on April 13th, 2016.

The factors ar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media exposure time, candidate information, channels to obtain candidate information(newspaper, TV, internet, candidate's reputation by others), vote decision factors(candidate, political party, issue, media) and influence assessment of issues by voters.

This study is done in Jeju Province, Republic of Korea and 600 voters had answered to the structured questionnaire from August 14th through 31st, 2016. 584 answered questionnaires are analyzed by cross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This study concludes that first, the critical periods for vote decision are one week before the election day for 31.4 % of the surveyed, 15 days before the election day for 22.7%, one month before the election day for 22.4% and two months before the election day for 15.2%.

30.3% of voters change their mind and support another candidate during

election campaigns. Morality, qualification, competence and work experience are the most decisive factors when voters cast a ballot. Political parties, pledges, candidate's reputation and advices from neighbors follow.

Second, age, academic background, income and political view meaningfully play a role in supporting a candidate. Voters in their 50s, 60s and over 70s most support candidates of the Saenuri Party. Voters in their 30s and 40s more choose candidate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s Party have relatively many supporters in their 20s and 40s and under 20.

Voters who consider themselves conservative choose candidates of the Saenuri Party and voters who consider themselves progressive select candidate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Voters who consider themselves moderate support candidates of the People's Party. Moderate and conservative voters are relatively more likely to change their mind before casting a vote.

Third, for media exposure time and channels to obtain candidate information, the internet factor covering online newspaper, articles at portal sites and social media meaningfully affect voter's behaviors.

Fourth, the candidate factor and the media factor meaningfully affect voter's selection. Saenuri Party supporters are more affected by the candidate factor and the media factor than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s Party.

Fifth, national issues of improper utterance by Saenuri Party members and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most affect voter's behaviors. And national issues of judgment on the government; conflict over candidate nomination of the Saenuri Party; conflict over candidate nomin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People's Party's judgment on the ruling party and the first opposition party follow. Jeju's local issues: controversy

over qualification in some candidates; omission of property report; and allegations of violation of election laws significantly affect voting behaviors.

In Jeju, discussion on the need for changing incumbent lawmakers affects Saenuri Party supporters and controversy over utilization of the reputation of Won Heeryong and controversy over the indemnity claim for the Jeju Naval Base affect supporters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Controversy over qualification in some candidates and allegation of intervention of election by an ex-governor affect supporters of the People's Party.

Overall, candidate factor, political party factor, media factor and issue factor as well as voter's political view and demographic and social variables affect voting behaviors during the Republic of Korea's 20th legislative election.

Key words: Republic of Korea's 20th legislative election, vote decision factor, voting behaviors, candidate selection, media factor, candidate factor, political party factor, issue factor, voter factor